

轉換期的東北亞秩序와南北韓關係

國內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1. 6. 13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蘇聯을 위시한 共產圈의 脫理念化 趨勢에 따라 우리는 최근 몇년간 東歐共產諸國의 崩壞, 獨逸의 統一, 美·蘇間의 和解 분위기 고조 등 歷史的인 事件들을 목격해 왔다.

아울러 최근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亞 地域의 國際關係에서도 美·蘇·中·日 등 周邊 4強間의 交叉接觸·交流가 增大되면서 일련의 秩序再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統一環境의 變化에 즈음하여 本 民族統一研究院에서는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를 現時點에서 照明함으로써 統一問題 研究의 方向을 再定立하고 나아가서 統一政策 樹立에 이바지하고자 1991년 6월 13일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라는 主題로 第1回 國內學術會議을 開催한 바 있다. 금번 國內學術會議에서는 많은 斯界 專門家들이 參與한 가운데 東北亞 4強과 韓半島, 南北韓 關係의 發展方向, 그리고 統一問題研究와 統一政策의 方向이라는 세 부분에서 發表와 활발한 討論이 있었다.

本 民族統一研究院에서는 향후 개최될 學術會議의 結果를 「세미나 시리즈」로 發刊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첫 報告書로서 금번 國內學術會議에서 발표된 4편의 論文과 討論內容을 묶어 「세미나 시리즈 91-01」을 發刊한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를 바르게 理解하고 向後 韓半島 統一環境 展望에 도움이 됨은 물론 統一政策 立案에 기여할 수 있는 參考資料로 活用되기를 期待한다.

1991. 7.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一 目 次

| | | |
|--|-----|-----|
| I. 開會辭 | 李秉龍 | 3 |
| II. 第 1 會議：東北亞 4強과 韓半島 | | 5 |
| 1. 美·蘇의 對東北亞 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朴英圭 | 7 |
| 2. 東北亞 秩序와 中·日의 役割 | 鄭鍾旭 | 20 |
| 3. 討 論 | | 33 |
| III. 第 2 會議：南北韓 關係의 發展方向 | | 49 |
| 1. 北韓의 對美·日 關係改善이 南北韓 關係에 미치는 影響 | 任鏞淳 | 51 |
| 2. 유엔加入 以後의 南北韓 關係：展望과 問題點 | 韓英鳩 | 65 |
| 3. 討 論 | | 76 |
| IV. 第 3 會議(綜合討論)：統一問題研究와 統一政策의 方向 | | 87 |
| 〈附錄〉 會議 概要 | | 105 |

빈 면

開 會 辭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民族統一研究院이 주최하는 第1回 國內學術會議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學術會議에 發表者와 討論者로 기꺼이 참여해 주신 斯界의 전문가 여러분께 感謝의 人事를 드립니다. 또한 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學術會議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民族統一研究院法」에 의해 금년 4월 9일 開院한 저희 民族統一研究院은 국가의 統一政策 樹立을 위한 專門研究機關으로서, 특히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力을 활성화하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方案들을 비롯한 統一問題 關聯事項, 그리고 統一過程 및 統一後의 諸般 問題點들에 대한 中·長期 政策研究 事業을 깊이있게 수행함으로써 民族統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平和統一의 産室이 되고자 渾身の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년동안 소련 및 동구권의 改革·開放과 體制變動, 美·蘇間 화해분위기의 고조, 獨逸의 統一 등 역사적인 사건들을 목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脫冷戰의 새로운 國際秩序」가 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과는 달리 東北亞秩序에서는 아직 눈에 띄만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東北亞에서도 中·蘇 關係正常化, 韓·蘇 修交, 韓·中 貿易代表部 設置, 日·蘇, 韓·蘇 頂上會談 개최 및 北韓의 對美·日 接近 모색 등 東北亞 域內國家들 사이의 兩者關係 再調整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일련의 秩序再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는 있으나, 東北亞의 國際環境은 아직도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의 東北亞 國際秩序가 어떻게 再編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韓半島 統一環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展望하고, 그 토대위에서 남북한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民族統一을 위한 中・長期 統一政策을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이 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근본 취지도 바로 轉換期의 東北亞 國際秩序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의 統一環境을 재조명하고 통일문제 연구 및 統一政策의 方向을 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던 北韓이 유엔에 加入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東北亞 軍事秩序의 調節 可能性, 東北亞秩序 再編過程에서의 中國과 日本의 역할, 北韓의 對美・日 關係改善 展望, 유엔 加入이후의 南北韓 關係 등과 같은 이 學術會議의 주제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學術會議가 유익하고 성공적인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자유롭고 진지한 意見을 교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한 開會의 人事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6. 13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 乘 龍

第 1 會議：東北亞 4強과 韓半島

1. 美・蘇의 對東北亞 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朴 英 圭(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長)

2. 東北亞 秩序와 中・日의 役割 ……鄭 鍾 旭(서울大 教授)

3. 討 論
 - 司 會：李 相 禹 (西江大 教授)
 - 討論者
 - 朴 慶 緒 (中央大 教授)
 - 具 宗 書 (中央日報 論說委員)
 - 崔 宜 喆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長)

빈 면

美·蘇의 對東北亞 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朴 英 圭 (民族統一研究院)

1. 序 論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國際秩序는 정치·군사적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high politics에서 경제관계가 주요 내용이 되는 low politics로의 이전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가 소련의 외교정책에 도입된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989년 12월 미·소 몰타 정상회담에서의 冷戰體制 종식과 平和 共存 선언, 1990년 10월 독일통일, 1991년 3월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 등 가시적인 국제질서의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소련 외교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는 아·태지역에도 투영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과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통해 아·태정책의 전환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989년 5월과 1991년 5월 중·소 정상회담, 1990년 9월 일·북한 수교 원칙합의, 1990년 9월 한·소수교, 1990년 10월 한·중 무역사무소 개설, 1991년 4월 한·소, 일·소 정상회담, 그리고 1991년 5월 북한의 UN가입의사 표명 등에 이르기까지 아·태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아·태지역에서의 변화는 域內國家 간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변화는 물론, 유럽과 달리 冷戰的 軍事對立이 지속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적 조절 가능성까지도 예견하게 하며 이에 따라 韓半島 安保環境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변화를 군사적 조절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조절 가능성은 양대세력인 미·소 간의 군사적 조절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바, 먼저 미·소의 동북아 및 아·태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동북아 군사질서의 특징과 재편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최근의 동북아 정세가 韓國 安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소련의 東北亞 및 亞·太政策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의 亞·太政策은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는 바, 특히 1985년 5월 라지브 간디 인도 수상 訪蘇중 고르바초프는 아시아의 安保問題를 다루기 위해 헬싱키 모델을 모방한 "全아시아 회의"(All-Asian Forum) 개최를 제안함으로써 집권 이후 최초로 아·태지역에 대한 蘇聯의 관심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時期別로 소련의 동북아 및 아·태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 1986. 7 :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 아·태지역내 核擴散 반대 등 포괄적 군축 제의
 - 中國과 善隣關係를 위한 협의 용의 강조
- 1988. 9 :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 "아시아 安全保障 強化를 위한 平和 提案" 7개항 제시
 - 蘇聯 極東地域에 대한 經濟合作 유치 등 구체적인 대외 경제관계 확대조치 제시
- 1988. 12 : 고르바초프의 유엔總會 연설
 - 아시아 지역 蘇聯軍 20만명 일방적 감축 제의
- 1990. 9 : 세바르드나제 蘇聯 외상의 블라디보스토크 제안
 - 아·태지역 "多者間 協議體" 구성 제의
 - 1993년 아·태 외상회의 개최 제의
- 1991. 4 : 고르바초프의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 연설

- 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군축축진과 협력강화를 위한 소·미·일 3國會議 개최 제의
 -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논의할 다자간 협의기구 창설을 위한 소·미·일·중·인도 간의 5國會議 개최 제의
 - 동북아시아·동해(일본해) 수역의 안전보장과 협력지대 창설 주장
 - 1991년중 INF 166기 추가 폐기, 소련 동부병력 20만명 삭감, 극동 지상군 12개 사단과 11개 항공연대 해체 및 금후 태평양 함대의 대형 수상함 9척, 잠수함 7척 등 16척 퇴역 발표
- 한편 內容別로 蘇聯의 아·태지역에 대한 접근은
- (1) 中國 등 周邊國家들과의 雙務的 關係改善
 - (2) 地域內 集團安保 體制의 수립
 - (3) 蘇聯의 亞·太地域 경제협력 기구에서의 참여로 대별된다.

소련의 새로운 아·태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는 中國과의 관계 정상화와 東南亞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라 할 수 있으며, 소련은 특히 東北亞에서 韓國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思考" 하에 소련의 對外政策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蘇聯은 아직 이 지역에서 日本 및 美國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은 군사·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美國 및 日本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태정책의 다른 두 주요 목표인 지역내 集團安保體制 수립 및 經濟協力 分野에서 踏步를 먼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고르바초프의 아·태정책은 "새로운 思考"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도 종전의 軍事的 方法에 의존하던 데서 탈피하여 政治的 接近을 통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련의 域內 영향력 약화를 만회 내지는 보완하려는 노력인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소련의 아·태정책은 安保·軍事問題를 최대 현안으로 다루고

10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있다. 다시 말해서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의 "太平洋 會議" 제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의 "아시아·태평양 協議體" 제의 및 세바르드나제의 "汎아시아 會議" 제의 등은 그 표현만 다를 뿐 모두 "유럽 安保協力會議"(CSCE)에 準하는 多者間 安保協議機構를 아·태지역에서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소련은 아·태 안보협력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유럽에서의 경우와 같이 아·태지역의 安保秩序 再編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소련의 政策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지역내 국가들의 보다 용이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세바르드나제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汎아시아 會議"의 단계적 추진방안으로 주요 軍事強國 外相會議, 全아시아 外長회의, 全아시아 정상회담 개최를 제시하였으며, 고르바초프는 東京연설에서 소·미·일 간의 3국회의 및 소·미·일·중·인도 간의 5개국 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넷째, 소련의 아·태정책은 아·태지역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쌍무적인 외교 및 경제관계 증진도 겨냥하고 있는 바, 이는 中·蘇關係 正常化, 韓·蘇 修交 및 日·蘇關係 改善 시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브레즈네프의 "아시아 集團體制" 구상은 對中國 封鎖를 주목적으로 하였던 반면에, 고르바초프의 아·태안보협력체 구상은 아·태지역 非核地帶化 및 이 지역에서의 海軍力 減縮 주장 등에서 표출되는 바와 같이 아·태지역에서 美國의 영향력 약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3. 미국의 東北亞 및 亞·太政策

미국의 아·태정책 방향은 1990년 4월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아·태지역 관련 安保戰略報告書에 잘 나타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1) 기본시각 및 입장

아·태국가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것은 유럽을 능가한다. 아·태지역에서의 전통적인 威脅概念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국내적 여건변화로 국방예산의 삭감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일의 防衛分擔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안보 목표와 지역상황에 입각해 볼 때 안보태세의 성급하고 과도한 변경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前進配置, 海外基地 維持, 雙務的 安保協定 維持 등 기존의 아시아 전략은 계속 견지될 것이다.

美國은 이 지역에서 앞으로도 지역균형자, 양심적인 중개자 및 최종적인 안보책임자로서 기능할 것이다.

(2) 戰略環境 평가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아·태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우세한 지위를 유지해 왔다. 미국은 군사력의 前進配置 및 이 지역 국가들과의 쌍무적 관계를 통해 對蘇封鎖에 성공하였다. 최근 이 지역의 엄청난 변화로 미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소련의 위협은 감소했고, 中國·베트남도 더 이상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필리핀·캄보디아 외에 동남아에서 共產勢力의 준동은 전반적으로 소멸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 지역 국가들의 민족주의 감정의 성장으로 인해 美軍駐屯의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 U. 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April 1990) 참조.

(3) 1990년대의 戰略環境 變化 可能性

1990년대의 아·태지역은 변화의 시기로 특징지어지며, 특히 中國, 北韓,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정치적 격동이 예상된다. 또한 경제적 경쟁의 심화로 安保關係가 複雜化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련은 改革에도 불구하고 極東戰力의 우위를 여전히 유지할 것이며, 이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미·일관계는 무역마찰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일본의 軍事大國化는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시킬 것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충돌의 잠재적 발화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아·태정책은 상호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성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東西關係의 진전에 따라 아·태지역에서도 군사대립의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소련이 과거부터 추구해 온 아·태지역에서의 勢力膨脹政策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즉 미국은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에 입각한 소련의 정책이 실제 행동에 의해 입증될 때까지는 現狀維持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겠다.

둘째, 미국은 소련의 軍事的 威脅이 아직도 악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태지역에서의 소련의 일방적 減軍 조치와 관련, 미국은 소련의 병력수준과 장비가 일부 감축되는 등 다소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낡은 장비를 없애고 숫자를 줄이는 대신 더 나은 현대식 무기로 대체하는 일종의 蘇聯軍 現代化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同盟國들과의 군사협력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은 한국·일본

• 필리핀 등에 주둔하고 있는 일부 지상군 減縮計劃을 발표하였으며, 체니 美 국방장관은 198개의 미군 해외기지의 폐쇄나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域內 同盟國, 특히 한국·일본에게 군사비 증액 및 합동군사훈련 등을 요구, 군사분야에서 동맹국들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군사적 부담을 줄이되 미국의 개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넷째, 미국은 적극적인 아·태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즉 미국은 아·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점증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同地域에서 미국의 기존 이해관계와 세력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역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아·태지역에서 최초의 政府間 協力機構로 제도화되고 있는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이 이와 같은 地域協力體를 경제적 실리추구는 물론 동·서화해의 진전과 소련의 평화공세 등에 따른 미국 중심의 단결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외교·군사적 협력기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 東北亞에서의 軍事秩序 再編可能性 檢討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군사·전략관계의 현상자체를 軍事秩序로 규정하는 경우, 현재의 동북아 군사질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첫째, 비교적 강력한 軍事力의 밀집화 현상
- 핵무기 보유 강대국들 (미·중·소)의 존재
 - 소련의 증강된 極東軍事力
 - 미국의 戰略 核武器와 재래식 무기 배치
 - 일본의 군사력 증강 추세

－ 한반도의 군사력

둘째, 雙務的 安保體制의 형성·유지

－ 미·일 상호 안보조약 체제

－ 한·미 방위조약 체제

－ 소련·북한 상호원조 및 방위조약 체제

－ 중국·북한 상호원조 및 방위조약 체제

－ 쌍무적 안보체제는 기본적으로 미·소 대립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사력 증강에 기초한 안보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셋째, 多邊的·集團的 安保體制의 不在

－ 유럽의 경우처럼 NATO, WTO, CSCE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지역적 수준에서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집단적 mechanism이 없음.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동북아에서의 軍事秩序 再編은 역내국가들 특히 미·소의 전략변화, 대규모의 군축, 새로운 안보체제의 형성 등을 의미한다 하겠다.

고르바초프의 과감한 개혁정책 추진에 따라 급진전되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개방추세와 미·소 및 東西軍縮 협상은 향후 東北亞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북아에서도 유럽의 변화에 상응하는 커다란 변화, 즉 동북아에서의 冷戰終熄과 이에 따른 軍事秩序 再編이 곧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째,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소련의 결정 및 행동, 즉 주변국들과의 쌍무적 관계개선, 제3세계 국가주둔 소련군의 철수, 일방적인 軍縮 및 地域紛爭의 평화적 해결 노력 등으로 인하여 고르바초프의 아·태 이니셔티브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전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아·태지역에서도 미·소간 대결의

열기가 상당수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미국이 점차 아·태지역에서의 指導力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비용부담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현재와 같은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것임을 의미한다.

넷째, 유럽에 이어 아·태지역에서의 冷戰體制 종식을 서두르고 있는 소련은 1989년 12월 몰타회담에 이어 유럽에서의 냉전종식 재확인을 선언한 1990년 11월의 CSCE 頂上會議를 계기로 고르바초프의 아·태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미·소의 동북아 및 아·태정책과 현존 東北亞 軍事秩序의 특징을 감안한 다음과 같은 요인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조절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同지역에서의 軍事秩序 再編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조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미·소의 東北亞 및 亞·太戰略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에는 거대한 미국 海軍力과 소련 地上軍이 비대칭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소가 軍縮對象兵力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 기간내에 각각의 전략수정 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소련이 현재까지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北太平洋 특히 對美 본토 공격능력이 집결되어 있는 오호츠크海의 海軍力 問題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북아에서 미·소 간의 군사적 조절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미국이 自國兵力을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 前進配置하고 있는 이유가 소련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의 地域均衡者, 양심적인 중개자 및 최종적인 안보책임자로서의 역할수행과 타지역에 대한 軍事力 投射能力 유지 등임을 감안할 경우, 소련의 위협이 감소된다 해도 미국의 기본전략인 전진배치, 해외기지 유지, 쌍무적 안보협정 유지 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미국은 소련이 아직도 국민총생산(GNP)의 15~17%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核武器를 포함한 전략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現代化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이 소련의 아·태 안보협력체 구성, 아·태지역 非核地帶化 및 이 지역에서의 해군력 감축 제안들을 아·태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력, 특히 해군력 감소와 이에 따른 미국의 影響力 弱化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유럽과 비교할 때 東北亞 安環環境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바, 유럽은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중심의 명백한 兩極構造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雙務關係를 바탕으로 安環關係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와는 달리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조절이 미·소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소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이 또 하나의 軍事的 變數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소련의 아·태 安環協力體 구성제외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부정적인 반응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 自國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희망하고 있는 日本은 아·태지역의 군축 및 지역분쟁 등을 협의하기 위한 특정 安環機構의 설립이 日本의 역할증대를 견제하는 것으로 인식, 반대하고 있다.
- 現代化 計劃 및 대외 경제개방 지역의 설정 등을 통해 改革·開放政策을 추진해 온 中國은 최근 "東北亞 經濟圈"형성 제의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東北亞 및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蘇聯의 아·태 安環協力體 구상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中國의 입장은 아·태 안보질서 재편 과정에서의 蘇聯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거부반응, 美·蘇 초강대국의 세계공동지배를 거부한다는 기본전략 및 7,000Km의 國境共有라는 지형학적 위치에 따른 불가피한 對蘇 不信感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소련이 제의하고 있는 아·태 안보협력체 구성은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역내 군사강국 간 군사문제의 해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즉 CSCE는 유럽에서의 예비적 문제해결, 특히 국경선 문제해결 및 군축협상 진전 이후에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태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地域紛爭(캄보디아, 한반도 등) 및 領土問題(북방 도서문제, Spratly Islands 등)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논의된 요인들로 인하여 軍事問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同地域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설립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1986년 이후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의 상황변화는 주로 소련의 일방적인 양보에 의해 가능했다. 따라서 향후에도 同地域에서의 상황변화는 소련의 양보, 특히 對美·日 양보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련의 國內情勢(국내정치의 保守化 傾向)와 기본적으로 방어위주의 소련 極東軍事力 배치 등에 비추어 보아, 소련이 군사적 조절문제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아·태지역국가들은 소련 國內情勢의 불투명성, 즉 고르바초프 체제의 위기극복 능력과 이에 따른 고르바초프 체제의 존속문제 및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지속여부를 우려하고 있는 바, 이는 域內國家들로 하여금 고르바초프의 아·태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結論 : 최근의 東北亞 情勢가 韓國 安保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 볼 때, 역내 국가들 특히 미·소의 전략변화, 대규모 軍縮, 새로운 안보체제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軍事秩序 再編은 소련의 획기적인 양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 변화, 그리고 지역분쟁과 영토문제 등 域內國家間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내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韓國의 安保環境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의 軍備統制는 동북아 4강의 군사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아·태 安保體制와의 관련하에서 그 하위체제로서 이차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동북아지역 국가들 간의 양자관계 개선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에 대한 의견일치 추세 등을 감안하면 동북아 지역의 주요 세력들이 軍備統制를 협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한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큰 바, 이 경우 韓半島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군비통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동북아에서의 군비통제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고르바초프는 核武器의 감축 또는 제거와 함께 아·태지역의 非核地帶化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 동북아의 경우 한반도와 일본이 그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이는 北韓의 한반도 非核地帶化 주장과 더불어 駐韓美軍 撤收問題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재편과 미·소 간의 군사적 절충, 그리고 美·北韓 접근과정에서 한반도 非核地帶化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駐韓美軍의 단계적 감군이 결정된 현 상황하에서 미국은 고립된 북한에게 긴장완화의 명분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고르바초프 이니셔티브는 아·태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安保秩序 再編과 이에 따른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겨냥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現狀維持政策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두 초강대국 간의 상반된 정책은 韓國 安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韓·美 安保關係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소련의 對韓半島 政策은 궁극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을 남북한 양측에 행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바탕으로 수립, 추진될 것임을 감안할 경우, 한·소 수교는 소련의 自國 政策에 대한 한국의 지지 및 동참을 강요하는 對韓國 압력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韓·美 安保關係 유지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넷째, 고르바초프 이니셔티브가 강화되고 駐韓美軍 및 한반도 非核地帶化 문제가 미·소간에 동북아 군사문제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국내에서는 현실적인 安保狀況이 변화된 것 같은 환상이 너무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고르바초프가 독창적인 제안을 통하여 일거에 駐韓美軍 및 한반도 문제해결을 시도할 경우, 이는 한국내의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한국의 安保政策 수립·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소련의 對아·태지역 평화공세 강화, 한·소 수교 및 한·중, 일·소관계 증진에 따라 향후 北韓의 對美·日 평화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이러한 외교공세의 일환으로 對南韓 평화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한국내에서 南北韓 關係改善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게 함으로써 한국의 합리적인 對北韓 政策의 수립 및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東北亞 秩序와 中·日의 役割

鄭 鍾 旭 (서울大 教授)

1. 東北亞秩序의 特徵

冷戰體制의 崩壞와 함께 그 윤곽이 점차 등장하고 있는 東北亞의 새 秩序에 關係해서 다음 몇가지를 우선 尤浬해야 한다.

첫째, 東北亞의 冷戰構造가 유럽의 그것과 相異하다는 점이다. 유럽에서의 冷戰秩序가 나토와 바르샤바同盟間의 軍事的 對立을 그 주된 내용으로 했음에 반해 東北亞地域에서는 美·蘇 간의 對立이 그 핵심 내용으로 그 對立의 형태에 있어 域內의 全地域을 포괄하는 多者的 同盟體制에 의해서가 아니라 美·蘇가 제각기 맺고 있는 雙務的 安保協力裝置에 의해 유지되었다. 따라서 東北亞에서의 冷戰構造 철거작업은 美·蘇間의 和解에 의해 바로 그 效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域內國家들 間에 존재하는 다양한 未決의 問題들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東北亞地域에서는 東歐에서 나타났던 社會主義圈의 瓦解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中國과 北韓에서는 共產黨 또는 勞動黨의 一黨獨裁와 社會主義 路線의 高수라는 基本立場이 크게 후퇴하지 않고 있다. 이는 中國과 北韓이 蘇聯의 軍事的 同盟圈에 직접 豫속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자주적 立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蘇聯이나 東歐에서 일어난 變化의 影響을 비교적 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中國과 北韓이 모두 "中國의 特性을 가진 社會主義 建設"이나 "우리 식대로 산다"는 主張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美國의 東北亞 政策과 戰略 變化가 갖는 二重的 性格을 유념해야 한다. 美國은 걸프전쟁에서 입증된 것처럼 脫冷戰의 데탕트時代에 존재하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동시에 財政赤字 등으로 말미암아 海外의 軍事力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일종의 霸權관리의 危機現狀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美國의 軍事力 평가에 따르면 현재 207萬의 美軍 병력은 92년에 189萬으로 減縮되고 95년에는 155萬으로 축소되며 海軍 함정수도 545척에서 451척으로, 空軍의 전략폭격기도 268기에서 181기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¹⁾ 이와 함께 海外의 軍事基地와 前進配置 병력도 축소조정되게 된다.²⁾ 다시 말해 감소된 軍事力으로 종전과 同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힘의 投射 능력을 유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政治·軍事的 영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二重的 性格 때문에 美國은 戰略軍과 海外固定配置兵力을 위주로 하는 防衛戰略을 수정, 機動力에 의존하는 신속대응 戰略概念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同盟國家들에 대해 防衛分擔金 증액을 위한 壓力을 가하고 있다.

넷째, 冷戰體制의 瓦解過程에서 나타난 초강대국으로서 蘇聯의 지위 상실은 東北亞에서 힘의 均衡狀態가 약화 또는 陷沒되는 상황을 결과했다. 여기서 우리는 冷戰秩序의 瓦解가 힘의 空白狀態를 招來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美國의 힘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冷戰時期를 통해 秩序維持의 기둥이었던 美·蘇間의 힘의 均衡이 깨어진 것이며 이러한 파괴된 均衡을 형성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이 몇 번에 걸쳐 제안한 바 있는 아시아 지역의 安保問題 논의를 위한 多者的 協議體案이나 이와 유사한 구상들이 있고 美國의 일부 관리들이 제시한 協同的 監視戰略(strategy for cooperative vigilance) 構想이 있는가 하면 다른 아시아國家들도 금년 여름에 여기 저기에서 새로운 安

1) *Military Net Assessment*, Department of Defense(DOD), 1991.

2)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DOD, 1990.

保代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들을 계획하고 있다.³⁾

결국 東北亞秩序 논의의 초점은 유일한 霸權國으로 남은 美國과의 關係 재설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問題와 域內의 強大國인 中國과 日本의 役割이 어떻게 정립되느냐 하는 問題로 압축될 수 있다.

2. 中國의 役割

中國이 바라보는 東北亞의 새로운 秩序는 한마디로 아직 新秩序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채 舊秩序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地域의 情勢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⁴⁾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東北亞 地域은 美·蘇·中·日 등 強大國들의 利害關係가 교차하는 地域으로서 다양한 세력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둘째, 이 지역에서의 美國의 우위에 대한 軍事的 도전은 蘇聯에 의해 계속되고 있으나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經濟的 도전은 日本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深化되고 있고,

셋째, 日本은 經濟的 超強大國이며 이 經濟力에 걸맞는 政治的 影響力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넷째, 蘇聯은 국내 사정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安定과 平和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中國과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兩國間의 經濟·文化分野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물론 軍事關係의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고,

다섯째, 이 지역의 특수성과 美·蘇의 서로 상이한 戰略的 利害關係

3)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9, 1991. 소련의 제안은 고르바초프가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1988년)에서 제시한 것과 금년 4월 訪日기간중에 제시한 案 및 세바르드나제 前外相이 1990년 9월 블라디보스톡연설에서 내놓은 것 등이 있다.

4) 中國의 질서관에 관해서는 「국제전략연구」(*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Beijing: Beiji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1990.1) 영문판 참조. 특히 Chai Chengwen(柴成文)의 논문, "The Situation Tending Towards Relaxation, the Struggle Being Acute and Complicated" 참조.

때문에 美國과 蘇聯 사이에 이 지역에서 포괄적인 軍縮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여섯째, 韓半島에서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아직도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南北韓 간에는 軍事的으로 대체로 均衡이 유지되고 있지만 經濟隔差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물론이거나 蘇聯 역시 韓半島에서 統一國家의 등장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립과 긴장 속에 共存狀態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⁵⁾

中國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國內政治 상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經濟改革의 방향에 대한 내부의 見解差가 완전히 解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정세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 특히 서방의 資本主義 國家들로 부터 자본과 기술을 계속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美國과의 協力關係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日本과의 經濟協力을 강화하는 것이 中國의 이익에 일치하는 일이다.

Shi Xia와 Cheng Feng의 논문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美國에 대해 대단히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日本의 經濟力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政治大國化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蘇聯에 대해서는 經濟·文化分野의 협력뿐 아니라 軍事分野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蘇聯과 美國이 韓半島 統一을 실제로는 바라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특기할 만하다. 美國에 대한 경계는 최근 인권문제와 무기판매, 무역적자 및 최혜국 대우 연장을 둘러싸고 美國과 中國과의 關係가 긴장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이며 구체적인 현안문제들을 초월하여 中國은 脫冷戰時代에서 美國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하는 것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中國의 이러한 입장은 작년 12월에 개최되었던 13期 7中全會가 채택한 바 있는 10개년

5) Shi Xia, "Perspectives of the Strategic Situation in the Asian-Pacific Region in the 1990s"와 Cheng Feng, "An Assessment of the Trend of Development of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Asian-Pacific Region in the 1990s", 「국제전략연구」, 1990.1, 특히 pp. 12-14.

계획과 8차 5개년 계획(8.5 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계획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무력에 의한 직접 侵略에 의해서가 아니라 平和의 手段과 方法을 통해 中國을 전복시키려는 음흉한 外國세력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른바 和平演變에 대한 경고이다.⁶⁾ 여기서 中國을 平和적 方法으로 변질시키고 顛覆시키려는 외부세력에 美國이 포함된다는 점은 금년 3월에 개최되었던 7기 4次 全人大에서 행한 李鵬의 報告에서도 시사되고 있다. 그는 89년 6월의 天安門사건을 바로 中國에서 社會주의체제를 顛覆시키려는 反動分子들의 和平演變의 시도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들 反動分子들을 지지하는 外國(美國) 역시 和平演變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동조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和平演變論과 美國에 대한 비난은 대외용이라기 보다 대내용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改革派와 保守派間의 대립에서 開放의 위협을 경고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실제 美國을 中國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이 軍事·政治적으로 그리고 日本이 經濟·政治적으로 東北亞地域과 亞·太地域에서 霸權勢力으로 등장하는 것을 中國이 바라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中國은 反霸權을 對外政策의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勢力均衡의 중요성을 뜻한다. 과거에도 美·蘇 사이에서 中國이 均衡者의 役割을 함으로써 勢力均衡을 유지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中國이 蘇聯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訪中이래 두 나라간에는 국방상과 외상은 물론 총리를 포함한 黨政 고위 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이 연이어졌다. 금년에만 해도 4월초에 베스메르트니흐 蘇聯 외상이 中國을 방문했고 5월초에는 야조프 국방상이 다녀갔다. 특히 야조프의 방문을 계기로 中·蘇關係는 이미 적대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두 나라는 서로에게

6) 和平演變에 관해서는 Susumu Yabuki, "An Evaluation of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paper presented at the Yomiuri Roundtable, Tokyo, May 1991에 잘 정리되어 있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며 두 나라 사이에 冷戰의 時代는 끝났다는 공식발표가 있었다. 또한 蘇聯의 최신 전투기인 Su-27을 24대나 中國이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⁷⁾ 이 결정이 사실이라면 中國은 건국 이래 최대의 무기구입을 蘇聯에서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거래는 부품과 조종사 훈련 등 추가비용까지 합쳐서 총규모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中·蘇의 접근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江澤民의 蘇聯訪問에 의해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江의 訪蘇는 고르바초프의 訪中에 대한 답방형식을 띠었지만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닌 두 나라 간의 현안문제를 解決하고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계기를 提供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江·고르바초프 共同聲明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양국이 霸權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시에 어떠한 형태의 霸權主義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⁸⁾ 蘇聯이 이미 霸權追求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中國의 인식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美國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中·蘇 간의 접근이 50년대에 있었던 反美 同盟關係로까지 발전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기에는 두 나라 사이에 이념상의 同質性이 이미 깨어져 버렸고 전략적 의미에서도 中國이 추구하는 것은 균형자의 役割이지 美國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同盟關係를 蘇聯과 맺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冷戰體制 이후의 東北亞世界에서 中國의 役割이 美·蘇의 어느 한쪽에 기우는 것이 아니라 양 대국사이에서 均衡을 유지하고 域內에서 政治的 發言權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일이다.

7) 「한국일보」, 1991년 5월 4일;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10, 1991.

8) 「한국일보」, 1991년 5월 21일.

3. 中國의 韓半島 政策

中國의 韓半島政策은 北韓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에 해당하지만 명분과 실리 그리고 국내외 정세와 주변의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결정되는 대단히 복잡한 性格을 띠고 있다. 中國은 이미 韓國과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北京주재 한국무역사무소 직원들에게도 外交官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사실상 準政治關係를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이 關係가 政治性이 없는 순수 민간차원의 것임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두 나라의 무역고가 39억달러에 달했고 금년에는 무려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두 나라 간의 經濟關係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政經分離의 原則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中國의 경직된 政策은 물론 北韓과의 關係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론의 이면에는 中國外交의 현실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中國은 공식적으로 北韓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는 한편 비공식적으로는 北韓의 開放과 改革을 중용하고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며 유연한 자세를 역설하고 있다. 日本과의 修交交渉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위해서도 적극적 중개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北韓이 유엔에 가입하기로 태도를 바꾼 최근의 사실에서 中國이 韓半島問題에서 차지하는 性格과 比重을 유추해 볼 수 있다.

北韓의 유엔가입 신청 결정은 한마디로 中國의 영향력이 가장 큰 압력요인으로 작용해서 내려진 것이다.⁹⁾ 蘇聯은 이미 韓國의 유엔가입을 지지하기로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에 中國의 태도가 유일한 관건이었다. 中國의 공식태도는 南北韓 동시가입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北韓이 주장해온 단일의석가입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南

9) Tao Bingwei,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s Policy," paper presented at the Yomiuri Roundtable, Tokyo, May 1991 참조.

韓의 단독가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李鵬의 평양방문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5월 2일에도 黨 對外連絡部長인 朱良은 南北韓의 동시가입을 역설하면서 南韓의 단독가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¹⁰⁾ 결국 李鵬은 다음날 평양에서 金日成과 회담하고 南北韓이 유엔에 동시가입할 것을 역설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南韓만의 단독가입이 실현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北韓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지적하고 이미 유엔의 여론이 韓國의 단독 가입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中國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임을 설명했을 것이다.¹¹⁾ 물론 李鵬이 北韓에 대해서 유엔가입을 종용하는 동시에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北韓의 核査察問題와 日本과 美國과의 關係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¹²⁾ 李가 北韓 지도자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美國이나 日本과의 관계개선 또는 修交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 核査察의 수락을 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李의 방문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北韓의 유엔가입 결정이 발표되었고 얼마 후에 金日成이 日本의 共同通信과의 회견에서 美國과 대화를 전제로 핵사찰의 수락 가능성을 시사한 바도 있다. 바로 이것이 中國이 北韓에게 北韓과 美國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 役割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北韓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유일한 맹방인 中國의 합리적 설득을 더이상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韓半島에 대한 中國의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은 東北亞에서 中國의 役割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본적

10) 일본 共同通信과의 인터뷰, 「한국일보」, 1991년 5월 4일.

11) Tao Bingwei, op. cit.

12) Sakutarō Tanino, "Recent Developments in East Asia and Japan's Foreign Policy: With a Focus o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aper presented at the Yomiuri Roundtable, Tokyo, May 1991.

으로 中國은 韓半島에서 勢力均衡이 깨어진다는 것은 韓半島에서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야기된다는 뜻도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韓半島에서 統一國家가 출현하는 사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中國의 입장에서 보면 韓半島에 강력한 統一國家가 등장하는 것은 분명 자국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統一獨逸의 출현이 나토라는 安保體制의 태두리 안에서 실현됨으로써 주변국가들의 의구심을 약화 또는 해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지만 韓半島의 경우에는 統一韓國을 견제할 수 있는 多者的 同盟體가 존재하지 않는다. 中國이 北韓을 지지하고 北韓이 美國이나 日本과 關係를 개선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韓半島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中國이 국내정치·경제적 이유로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보다 자기적 시각에서 보면 中國이 北韓을 지지하고 東北亞의 국제사회에서 北韓이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韓半島에서 南北韓 간에 勢力均衡을 유지함으로써 스스로의 安保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점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4. 日本의 役割

冷戰體制의 沒落과 새로운 秩序 등장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역시 日本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정치·군사적으로는 극히 제한된 役割에 만족해야 하는 日本의 기형적 역할은 결국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다 할 수 있다. 平和憲法에 의해 발이 묶여 있기는 하지만 그 平和憲法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역시 냉전체제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蘇聯의 위협으로부터 日本을 지켜주는 것이 美國이었으며 美·日間의 安保管置는 冷戰體制가 지속되는 한 그 효율성이나 당위성이 도전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冷戰體制의 붕괴는 적어도 假想敵이었던 蘇聯의 군사적 위협을

약화시키면서 美·日安保條約의 性格과 役割에 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90년의 日本防衛白書는 蘇聯을 더 이상 日本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美·日安保條約이 무엇때문에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美·日安保條約의 개정에 관한 논쟁은 그것이 日本이 東北亞에서 장차 말아야 할 役割이 무엇이나 하는 問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많은 日本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은 美·日安保條約이 日本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경제적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해 주는 안전판인 동시에 日本의 정치·군사적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발육상태가 좋은 다 자란 어른에게 어린애의 옷을 입혀놓은 것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이러한 논리를 연장하면 冷戰體制가 붕괴되어 버린 지금에 와서는 安保條約이 당연히 폐기 또는 새롭게 수정되어야 하고 平和憲法도 自主憲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日本 自民黨의 간부인 아이치 가즈오(愛知和男)가 말한 것처럼, "美國과 日本은 똑같은 대국이다. 日本의 對美從屬을 초래한 美·日安保條約은 양대국간의 평등과 협력을 명시한 相互友好協力條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日本이 보다 독자적으로 安保問題를 다룰 수 없다"라는 주장은 특히 걸프전쟁 이후에 日本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¹³⁾ 걸프전쟁에서 日本은 90억달러이라는 전쟁비용의 분담금을 美國에게 제공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우물쭈물한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로 美國으로부터 불만을 샀을 뿐이다.

그러나 美·日安保條約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美·日安保條約이 日本의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日本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지렛

13) 「朝鮮日報」, 1991년 5월 5일.

대 또는 사다리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統一獨逸이 나토의 군사체제에 속함으로써 유럽國家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日本도 美·日安保條約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그 政治的 役割增大를 시도할 때 비로소 과거 日本軍國主義를 회상하면서 日本의 政治強大國化를 경계하는 아시아 國家들의 우려를 무마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¹⁴⁾

美·日安保條約이 족쇄이든 지렛대이든 사다리이든 간에 日本이 아시아와 東北亞에서 보다 적극적인 役割을 모색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가이후首相은 日本의 戰後 역사상 처음으로 掃海艇을 걸프지역에 파견한 바 있으며 유엔의 캄푸치아 평화군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록 전투와는 무관한 것이며 어뢰를 제거함으로써 海路의 안전을 보장하고 國際機構의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등 인도적이며 평화지향적이라 하지만 日本의 自衛隊가 외국에 파견된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가이후총리는 또한 4월 27일 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및 필리핀을 방문했으며 특히 싱가포르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면에서도 地域問題를 비롯 폭넓은 국제평화유지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¹⁵⁾ 그는 日本이 地域問題에서 기여할 수 있는 폭넓은 役割의 구체적 예로서 韓半島와 캄푸치아 問題解決을 들고 있다.

日本과 北韓의 修交交渉은 日本이 東北亞에서 보다 폭넓은 役割을 모색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이자 시금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특히 주목되고 있다. 작년 9월 自民黨과 社會黨의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 金日成과 가네마루 간에 修交交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세차례의 예비회담을 연 끝에 시작된 본회담은 지난 5월 제3차 회의를 北京에서 개최하였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바 있다. 日本과 北韓간

14)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9, 1991.

15) 「東亞日報」, 1991년 5월 5일.

의 修交交渉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北韓의 核査察 수락문제와 경제협력문제 그리고 3차회담에서 日本이 제기한 李恩惠問題로 압축할 수 있다. 이중 경제협력문제와 李恩惠問題는 北韓과 日本이 각각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解決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경협문제는 北韓側の 입장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결국 1965년 韓·日國交正常化의 先例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解決할 수 있을 것이며 李恩惠問題는 日本側이 問題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核査察問題는 性格이 다르며 대단히 복잡한 問題라 할 수 있다. 만약 北韓이 핵무기개발을 선택했다면 안전협정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하면서 지연시키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안전협정에 가입한 후 안전협정의 약점을 악용하여 계속 핵무기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물론 반대로 核査察問題가 北韓이 美國과 접근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면 核査察問題는 군사적으로 큰 問題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핵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면 이는 韓半島에서 核競爭時代의 도래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며 東北亞秩序에 엄청난 파문을 던져 줄 수 있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日本은 中國과 마찬가지로 韓半島에서 견제와 均衡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政策을 추구해 왔다. 韓半島에 統一國家가 출현하게 되면 이는 日本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며 오히려 南北韓이 공존하는 가운데 日本이 양쪽 모두와 정식 外交關係를 맺게 되면 이른바 分割統治(divide and rule)의 이점을 노릴 수 있다. 이는 中國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을 내세워 북쪽을 다스리고 북쪽을 이용하여 남쪽을 견제하는 以夷制夷政策이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日本과 北韓의 修交는 中國이나 日本의 이해가

16)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해서는 Andrew Mack, "The Nuclear Issue and Arms Control in Korea," unpublished paper, September 1990 ; 같은 저자의 *Foreign Policy*(Spring 1991) 논문도 참조.

일치하는 점일 수도 있다.

5. 結 論

東北亞에서 中國과 日本은 冷戰體制의 瓦解속에서 자신의 域內主導權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中國은 美國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여 蘇聯과 提携關係를 강화하고 있으며 日本은 美國과의 安保關係를 활용함으로써 域內國家들의 반발과 우려를 무마하면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려는 政策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韓半島 問題解決은 東北亞秩序 形成의 性格과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中國과 日本에게는 자신들의 域內役割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韓半島에서 南北韓이 서로 均衡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中國과 日本의 이익에 합치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脫冷戰時代에 있어 東北亞秩序는 결국 美國과 蘇聯과 中國과 日本의 4강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勢力均衡을 형성하는 4강의 時代가 본격화하는 時代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이 추진하고 있는 環日本海經濟圈의 구상도 日本이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域內秩序 形成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政治的 役割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東北亞秩序의 향방은 中國의 國內政治 變化, 蘇聯의 改革政策의 성공여부, 南北韓의 國內정치상황 전개 그리고 日本과 美國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第 1 會議 討論

이 상 우 교수(사 회) : 分斷 이후 현재까지 統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연구도 많이 되어 통일문제를 다룬 약 2만 여편의 논문이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연구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統一研究를 체계화시킬 구심점이 不在한 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러한 구심점에 대한 필요에 따라 여러 노력으로 民族統一研究院이 설립되었는 바, 통일연구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民族統一研究院이 젊은 학자들을 많이 포용해 통일이 한 발 다가온 느낌이 든다.

統一環境에 대한 분석은 동북아 및 국제정세의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통일문제는 국제질서 특히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世界秩序는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동북아 질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 역시 유엔가입 의사표명을 계기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제 국제무대는 北方外交의 독무대가 아니며, 북한 역시 드디어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등 南方外交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북한과의 선의의 경쟁, 나아가 협조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된다.

통일을 달성하는 데에는 국민의 의지, 통일정책 추진능력, 그리고 국제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며, 오늘의 학술회의는 바로 세번째 문제인 統一環境에 관한 것이다. 오전 회의에서는 지명토론자들에게 각 10분씩을 할애하고 모든 참가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중석에 토론을 개방토록 하겠다. 먼저 박경서 교수의 지명토론을 듣기로 하겠다.

박 경 서 교수(지명토론) : 발표자들께서 발표한 주제가 동북아 질서, 남북한 관계이지만 이는 統一問題에 직결되는 문제로 오늘의 논의는 통일문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발표논문

는 다음의 세 가지가 추가되어야 했지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첫째, 東北亞 安保環境 變化에 따른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의 모습은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 특히 對韓半島 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국의戰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오늘 거론되는 문제중 核問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非核地帶化라는 언급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4강의 核政策은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이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셋째, 발표자 두 분 모두 한반도 주변 4강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태도보다는 토론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발표자의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첫번째 戰略問題의 경우, 박영규 실장은 미국의 군사전략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 근간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종욱 교수는 걸프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이 前進配置 내지 해외고정배치 병력 위주의 방위전략을 수정해서 기동력에 의존하는 迅速對應軍을 중심으로 한 전략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두 분 간의 입장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또한 걸프戰에서는 신속대응군 전략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 정종욱 교수의 암시 같은데, 성공을 거둔 면도 있지만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막의 방패” 작전이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속배치군을 파견하는데 4~5개월의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노출되었다. 동북아에서의 분쟁 발발시 미국이 이 지역에서 미군기지를 유지하지 않고 외부에서 군사력을 투입할 경우 이 戰略이 걸프戰에서처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둘째로, 두 편의 논문 모두 美·蘇·中의 한반도에서의 核政策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와 관련한 4강의 核戰略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전력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특히 소련의 비핵화 주장과 관련하여, 과연 북한만의 전략이나 아니면 이에 소련과 중국의 전략이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진정한 의도를 보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4강의 핵전략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정종욱 교수의 발표는 한반도 주변 4강의 對韓半島 統一政策과 관련하여 4강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반도에 統一國家가 등장할 경우, 일본은 이를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9페이지)"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문맥상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강도가 중·소에 비해 비교적 약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4강 가운데 일본이 가장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또한 미·중·소가 韓半島를 "divide and rule" 하기 위해 統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한반도의 통일이 반드시 미·중·소에 불이익이 되겠는가? 한반도가 통일되면 4강에게 이익이 되는 점은 없는가, "divide and rule"의 부담은 없는가, 일본을 견제할 필요에서도 미·중·소가 꼭 통일을 불원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脫이데올로기時代에서는 통일된 한국과 수교하는 것이 반쪽과 수교하는 것보다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을 듣고 싶다.

그리고 박영규 실장의 논문과 관련하여, *Foreign Affairs*誌 최근호에서 William Crowe 美 前합참의장이 駐韓美軍의 3단계 감축과정에서 駐韓美 제2사단 등 지상군 철수를 주장한 바 있다. 즉 한반도에서 미국의

地上軍을 유지하지 않고도 해·공군력만으로도 對北韓 抑止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Crowe제독이 전직 합참의장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전략변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 회 : 다음으로 구중서 논설위원의 지명토론을 듣기로 하겠다.

구 중 서 논설위원(지명토론) : 두 발표자 모두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 듯 하다.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며, 따라서 발표에 대해 느낀 바와 보다 장기적인 차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오늘날 동북아 질서는 세계질서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으며, 和解 및 均衡을 지향하고 있다. 동북아의 4강 중 霸權을 추구하던 미·소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일의 세력이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강화되고 있다. 아는 4강간의 均衡狀態가 재조정되면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제질서의 성격면에서도 전쟁보다는 외교, 군사력 보다는 경제력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질서에서의 地域化 趨勢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동북아 질서재편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남북한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다. 한국과 북방간의 교류가 증대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미·일에 편중되어 있는 대외관계에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도 마찬가지로 대미·일 접근을 통해 外交的 偏重性에서 탈피하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북아에서 미·소는 패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일도 모두 地域霸權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2차대전 중에도 大東亞共榮圈의 맹주를 자처하며 패권을 추구한 바 있다. 이러한 4강 속에서 분

단되어 있는 한반도는 미·소·중·일과의 관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래의 지역화 추세를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4강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통해 미·소를 견제하면서 國家利益 중심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통일을 모색하기 위해서 4강과 균형된 善隣關係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기존의 友邦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국제 질서의 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중·소와의 관계도 지속·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며, 한반도의 軍備縮小와 非核化 協商을 추진하되 실행단계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박영규 실장은 결론에서 고르바초프의 독창적인 제안으로 미군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불리 동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은 질서변화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종욱 교수가 지적한 일본의 “環日本海經濟圈”(동해경제권) 등 이 지역의 협력체제 - 이는 소련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에는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유리한 입장에 있는 만큼 접촉과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軍事的 對決關係에서 외교적 협력, 경제적 의존관계로 발전해 갈 때, 우리가 주변질서에 적응하기도 쉽고 國益이 희생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경서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平和攻勢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보다 우위에 서 있는 입장

을 고려하여, 경제협력이나 군비축소 등에서 다소간의 양보를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軍備協商問題를 기피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불필요한 것이다. 이는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군비통제 자체나 핵논의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므로 기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國家聯合 수준의 協力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두 국가로 민족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주변 4강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주변 4강은 무작정 우리의 통일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 회 : 이제 민족통일연구원의 정책연구실장으로 있는 최의철 박사의 지명토론을 듣기로 하겠다. 시간을 고려하여 짧게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최 의 철 실장(지명토론) : 두 발표자께서는 최근의 국제질서의 변화 즉 脫冷戰化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좁게는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정치·군사질서 상에서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기 보다는 국제질서 변화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맥락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먼저 두 발표자에게 공통되는 질문으로, 한반도 주변 관련국인 미·일·중·소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면, 향후 우리의 傳統友邦인 미·일에 대한 우리의 統一外交와 北方外交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겠는가?

두번째로 박영규 실장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동북아 군사전략 문제에서 미·소 양국의 중장기 아·태 및 동북아 軍事戰略 目標에 대한 언급이 불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미·소의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소의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논문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현재 전략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거론하고 있으나 향후의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소련이 평화공존 세력인지 현상에 대한 도전세력인지에 대한 언급이 불분명하다. 또한 東北亞 軍事秩序 재편문제에 있어 박영규 실장은 미국의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동북아에서도 유럽에서 처럼 소련의 일방적인 양보와 독창적인 제안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미국 역시 장기적으로 현 경제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며, CSCE 등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앞서 박경서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海洋勢力인 미국내에서도 해군력 감축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에서의 미·소 군사전략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우리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정종욱 교수에 대한 질문으로, 현재 중국은 국내정세의 불안으로 한반도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즉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對日牽制라는 목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또 한·중관계가 급속히 진전될 것임을 고려할 때 북한과 대만관계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대응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사 회 : 그럼 지금부터 청중석으로 토론할 기회를 넘기기로 하겠다.

홍 순 남 교수 : 먼저 박영규 실장에 대한 질문으로, 미·소의 몰타체제 협력이 아·태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인 듯 한 데, 이는 유럽

질서의 틀을 아시아에 그대로 대입하려는 관념론적 접근방법에서 비롯된 것 같다. 소련의 양보를 전제로 국제질서가 변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둘째로, 정종욱 교수에 대한 질문으로, 박경서 교수의 질문과 유사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반도 환경이 강대국 간의 國家利益 變數로서 이용된다는 가설하에서 정종욱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다. 즉 과거 냉전체제의 틀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했다. 만일 한반도 정치변수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본다면 이것이 多者間協力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CSCE가 인도지나 및 인도분쟁 등 아시아적 특수성이 있는 환경에서 찾아질 수 있겠는가?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사회: 질문을 다 모은 다음 마지막에 두 발표자가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다. 토론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은 발언해 주기 바란다.

길영환 교수: 박영규 실장에 대한 질문으로, 첫째, 미국 軍事政策 특 징으로 양면성과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상호 모순적이라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인데 미국의 정책은 實用主義的인 입장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된다.

둘째로, 특히 미·소 양대 강국의 世界戰略에 입각하여 볼 때, 소련은 지정학적으로 대륙에 근거한 국가로 육·지상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마한(Alfred Thayer Mahan)이 언급한 바와 같이 海洋國家이다. 양자간의 세계전략 및 아·태정책 결정에 역사적, 지정학적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한다.

사 회 :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말해 주었으면 한다.

이 만 호 씨 : 정종욱 교수는 4강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였으나, 특히 일본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1992년은 임진왜란 400주년이 되는 해로, 일본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 문화, 정신적 침투는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 회 : 오늘 발표가 완벽해서인지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는 듯 한데 앞의 질문에서 크고 중요한 문제가 몇가지 지적되었으므로 다른 질문이 준비되는 동안 두 발표자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다.

박 영 규 실장 : 여러가지 좋은 지적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먼저 박경서 교수의 문제제기 중, 첫째, 미국의 迅速對應戰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대응전략을 미국전략의 변화라고 여기지는 않는다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본 군사전략은 前進配置(forward deployment)이다. 미국의 신속대응군 창설은 전진배치전략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신속대응군의 창설은 미·소가 데탕트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구상되어 온 것이며, 따라서 이를 미국 군사전략의 기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駐韓美軍 撤收와 관련된 Crowe 제독의 *Foreign Affairs*誌 기고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며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표한 내용중 "한반도가 군비통제의 우선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언급은 駐韓美軍의 제2단계 및 제3단계의 철수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언급한 것이다. 특히 최근 많은 경우 추측보도이거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핵지대화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核武器 철수를 일본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한·미·일 간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美國이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북한에 핵선제 불사용을 약속했다" 는 등의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같지 않으며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戰術核은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철수될 듯 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도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되며, 그럴 경우 한반도 軍備統制 역시 앞당겨질 수 있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이다. 미국은 전술핵을 철수할 경우 역지의 중요한 요소로 off-shore 核武器에 의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Crowe제독의 입장과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의철 박사께서는 미·일·중·소가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이지 않다면 우리의 統一外交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사실 미·일·중·소가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이지 않다고는 말한 바 없다. 단지 동북아 군사질서 재편이 그렇게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아마 軍事秩序 再編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韓半島 統一에 대해 주변 4강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하신 듯 하다. 그러나 이 양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군사질서 재편이 꼭 이루어져야만 한반도 통일이 된다는 것은 아니며, 군사질서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는 아니다. 다만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군사질서가 그렇게 쉽게 재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소 전략변화와 관련, 향후 미·소의 전략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최의철 박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분간 미국의 전략은 변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길영환 교수의 언급에 대해서도 답이 되겠지만, 미국은 海洋勢力으로 군사력의 전진배치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前進配置는 해외기지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며, 항공모함의 배치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해양세력인 미국이 전진배치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Global Power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前進配置戰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 대한 현재의 전략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모델을 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홍순남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나 자신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스스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소련이 CSCE를 CSCA로 시도하고 있어 이를 사실로 받아 들여 분석한 것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동북아질서의 변화에 있어서 소련의 양보만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은 現狀維持를 원하고 있으며 소련이 변화를 원하는 까닭에 소련이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사실로 받아 들이고 분석을 한 것이다.

길영환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美國의 外交政策이 실용적이고 유연하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국 외교정책의 양면성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은 소련의 國防費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의 소련의 위협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커다란 전략변화 없이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두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강하게 표현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순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사 회 : 다음은 정종욱 교수가 종합해서 답변해 주겠다.

정 종 욱 교수 : 기본적으로 질문 또는 논평의 흐름과 저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지금부터 답변하는 것은 반론이라기 보다는 각주 정도의 언급이 될 것이다.

박경서 교수가 지적한 문제 중, 첫째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대해서는 박영규 실장이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본인의 발표주제가 중·일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간략히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미국이 신속대응군 체제로 역점을 옮기는 것은 이것이 전략적 변화이든 혹은 전술적 변화이든 간에 반드시 걸프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 말기에도 논의되고 있었으며, 특히 부시 대통령 등장 이후 經濟難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미군의 기본적인 軍構造와 軍配置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상들은 꾸준히 제시된 바 있다. 이는 Nunn-Warner 수정안에 따른 1990년 4월의 미 국방부 대의회 보고서에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걸프戰이 신속대응전략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음은 인정한다.

둘째로, 신속대응군 구상과 미국 전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박영규 실장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 군사전략이 실시되는 상황과 실천 수단에서는 상당한 구상의 변화가 인정된다. 과거 미국의 전략은 對蘇牽制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미군을 유럽 등 해외에 주둔시켜 왔다. 또한 전략핵에 의존하여 대소견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冷戰體制가 붕괴되면서 대소견제가 대외전략상 차지하는 위치는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주요한 군사목표로 소련의 견제와 함께 地域紛爭의 억제와 地域平和 유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신속대응군은 전략목표와 수행수단의 변화 차원, 특히 지역분쟁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진배치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며, 海外基地 숫자가 감소되고, 주둔 병력유지 수준이 조정되며, 따라서 미국과 군사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방위비 분담 등의 부담이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셋째, 핵에 대한 4강의 정책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실 동북아 및 한반도의 장래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핵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핵에 관한 중·일의 입장은 분명하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에서의 非核化를 주장한 북한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물론 중국은 1970년대에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미군의 抑止力과 핵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확대 해석한다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핵의 억지능력도 수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非核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開發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안전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강대국 주도의 국제정치질서의 발상이라는 이유에서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IAEA와 핵안전협정은 체결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자 해도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일본 역시 기본법상 핵 자체가 배제되어 있으며,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武裝 가능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북경에서 열린 일·북한 수교회담에서 核査察問題가 제기되었던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아마도 북한이 핵사찰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마도 미국과의 막후접촉과 일본과의 수교 협상에서 핵사찰 수용이 중요하다는 인식 등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넷째, 중·일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中立化나 非武裝에 가까운 형식의 통일은 적어도 일본과 중국에 군사적 위협을 거의 주지 못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인식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安保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중국의 韓國戰 參戰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전 시 중국의 참전의도에 대한 새로운 조명에 따르면, 한국전 초기에는 소

련이 참전을 중용하였으나 막상 참전할 당시에는 소련은 약속과는 달리 군사적 지원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중국이 독자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혀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統一國家의 출현은 滿洲 및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만큼 중국에 불확실성을 제기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더 부정적이라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강조를 둔 듯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으며 표현상의 잘못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이러한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중국이 통일을 지지하고 일본만이 통일에 반대하느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언급한 것이다.

다음으로 최의철 실장이 지적한 문제 중, 첫째, 중국이 국내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對韓半島政策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논지는 국내정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對北韓政策은 일관성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중관계에서 經濟協定 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UN 가입후 한·중관계가 증진되고 政經分離 原則이 변화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일·북한 수교교섭 진전에 따라 한·중 간의 수교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北韓·臺灣關係는 현재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대만이 한·중관계를 고려하여 對北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홍순남 교수가 지적한 駐韓美軍 撤收問題는 미국의 대아시아, 대동북아, 대한반도 정책을 고려할 때 낙관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극단적으로 말해 남북한 관계가 평화정착 상태에 이르면 북한이 오히려 미군의 주둔을 희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아시아 냉전체제의 약화로 안보위협이 감소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으나, 오히려 勢力均衡

의 와해를 초래하여 안보문제의 중요성과 역동성을 새삼 인식시켜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 회 :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끝마치기로 하겠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데 감사한다.

빈 면

第 2 會議：南北韓 關係의 發展方向

1. 北韓의 對美・日 關係改善이 南北韓 關係에 미치는
影響……………任 鏞 淳(成均館大 教授)
2. 유엔加入 以後의 南北韓 關係：展望과 問題點
……………韓 英 鳩(外交安保研究院 教授)
3. 討 論
 - 司 會：柳 世 熙 (漢陽大 教授)
 - 討論者
 - ・高 秉 喆 (일리노이大 教授)
 - ・鄭 鎮 渭 (延世大 教授)
 - ・李 達 熙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빈 면

北韓의 對美·日 關係改善이 南北韓 關係에 미치는 影響

任 鏞 淳 (成均館大學校)

1. 머리말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은 한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언론들은 며칠동안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에 대한 이유와 배경의 설명으로 점철되었다. 이제 북한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몇가지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로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려는 의도에서 충격을 받은 결과이다. 한국의 유엔가입을 억제하기도 힘들고, 한국만이 가입한 후에 올 수 있는 휴유증에 대하여도 예견하기가 힘들다. 기왕에 유엔을 무시할 수 없다면 이 기회에 한국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이다.

둘째,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위하여 유엔에 가입한다는 논리이다. 최근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국제적으로 孤立狀態에 놓여있다. 대외적으로 테러리즘의 수출국이라는 낙인이 찍혀있고, 國際的信用度가 실추되어 있다. 이같은 처지에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6.25의 침략자라는 허물을 벗고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넓히려는 의도이다.

셋째는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체제유지에 도움을 주고 남북한 平和共存體制를 유지해 보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이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논리이다. 특히 앞으로는 駐韓美軍 철수문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수문제를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해 보려는 북한의 의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했다는 결론이다.

넷째, 북한의 유엔가입은 平和共存이라는 대의명분하에 대내적으로 체

제의 유지에 목표를 두고, 한국내의 反體制 運動圈의 입지를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논리이다. 한국내에서 반체제 인사들의 입지를 도와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세적 입장을 약화시키자는 의도에 의한 정책이다.

다섯째, 북한의 결정은 소련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에 의한 결과라는 논리이다. 즉 과거에는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기에 북한이 三角關係를 잘 이용하였는데, 최근 1989년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하고, 급기야는 소련과 중국이 國境問題 해결을 위한 조약을 맺을 정도로 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의 입지가 난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위시한 東北亞에서 평화구축을 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평화유지를 이루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북한이 간과할 수는 없으며, 특히 최근 북한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북한의 돌연한 유엔가입 결정은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경제적 곤경에 처해있다. 식량도 부족하고 연료가 부족하여 군사훈련의 시간마저 줄여야 한다. 동구의 변화와 독일통일로 인하여 체제의 유지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 무리한 정권의 계승도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다. 이같은 국내문제를 타결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본과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은 최근 南方政策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는 北京에서 16차에 걸친 참사관급 회담을 갖고, 일본과는 3차에 걸친 차관급 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일본과 미국과의 급속한 關係改善을 위하여 유엔가입을 결정했다는 결론이다.

물론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은 북한의 다양한 의도하에서 이루어졌으리라 보고, 나름대로 변화하는 國際情勢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정책의 소산이다. 과연 북한이 대미·일 정책을 이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북한의 미·일관계의 개선이 남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봄은 당연한 처사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를 고찰해 보고 이같은 함수관계가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추측해 보고자 한다.

2. 美國과 北韓과의 關係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韓國戰爭으로 인한 심한 적대관계로부터 시작했다. 1960년대까지 북한은 미국을 민족통일을 방해한 원흉으로 낙인 찍고 선전하였다. 한국에서의 미군철수는 북한의 최대 외교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북한은 미국이 越南戰에 적극 개입하자 미국을 帝國主義로 낙인을 찍으면서 대대적인 반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구호를 뒷바침하듯이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 사건과 1969년 4월 16일 북한이 미정찰기를 격추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같은 對美 強硬態度가 1970년도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변모하였다. 1969년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소련과 전략무기감축협상을 했고 중국과 데탕트를 이루었다. 때를 같이하여 김일성도 미국인들과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싶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면서,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솔스베리와 해리슨을 초청하여 김일성이 이들을 접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남북한의 평화협정 및 상호불가침협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미군이 철수해도 된다고 천명하였다. 1972년 7월 4일 南北共同聲明의 발표와 아울러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은 분명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있을 후 한국정부와의 협의하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미국정부의 태도를 감지하면서, 북한은 在美僑胞의 설득작전에 나섰다. 재미교포, 학자 및 실업인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졌다. 카터 행정부가 취임한 후 북한은 對美接觸을 시작하면서, 종래 부르

던 미제국주의자들이란 호칭 대신 미국을 미합중국이라 지칭했다.

미국은 1975년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이 제안한 한반도의 交叉承認 내지는 4者會談(미·중·남북한)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천명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하여 단독회담을 요청할 때마다 미국은 4자회담을 하자고 응수했다. 실망한 북한은 카터 대통령을 간악하고 교활한 자로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1979년과 1980년도에 걸쳐 미국에 문화교류를 제의하고, 미 의회 의원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실권자인 鄧小平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의 내정이 불안정한 때를 기하여 재미교포들과 접촉을 추진하면서, 미국 하원 의원 및 학자를 북한에 초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북한의 노력에 반해, 초기 레이건 행정부는 북한을 국제적 테러집단의 명부에 올리는 등 비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1983년 버마 사건이래 미국은 더욱 북한에 대하여 강경한 태세를 취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3자회담에 대하여 미국은 계속 4자회담을 제의하였다. 1984년 북한이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창출한 合營法에 대해서도 미국은 여전히 냉담했다.

이같은 미국정부의 정책을 완화하기 위하여 북한은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와 미국 민간인을 통한 소위 人民外交를 정부차원의 외교와 병행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군사정책 위주인 전쟁방지, 한반도 현상유지, 대소건제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북한의 의도를 수용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1987년 4월에 아사히 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동시에 1987년 3월 미 국무부는 미국 외교관의 북한관리와의 접촉을 허락하였다. 이후로 많은 재미교포가 북한을 방문하고, 미국의 전직관리와 명성이 있는 학자들이 북한 방문길에 올랐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北京에서 참서관급의 외교회담을 16차례에 걸쳐 가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난 5월에 가졌던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도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미국은 회담을 통해 북한이 核安全協定の 규정에 따르고 국제적 감시를 수락할 것과, 남북한 관계개선, 테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북한은 회담대표의 지위를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실이 없었다.

이제 북한의 對美政策의 결과를 보면 몇가지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미정책은 官邊外交의 실패 내지는 제한된 성공으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 정치적 협상을 하려고 노력했다. 중국, 이집트 등 제3국을 통하기도 하고 언론인, 학자, 전직관리, 정치인을 접촉하고 현직관리를 유엔을 통해서 접촉하기도 하였으나 전부 실패하였다. 1989년에 와서야 겨우 참사관급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둘째, 관변외교에 비해 민간인을 통한 북한의 대미접촉은 비교적 결실을 보았다. 북한은 저명한 언론인, 학자, 전직관료, 현직정치인들을 북한에 초청하였다. 물론 북한을 방문한 이들이 미·북한 관계개선에 도움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셋째의 특징은 북한이 재미교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民間外交의 得을 보았다. 수많은 교포학자들을 북한에 초청했고 이들을 통해서 미국인의 초청에 도움을 받았다. 고향을 방문한 교포들은 북한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앞으로의 관계개선도 이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북한의 통일정책에 이들 재미교포가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본다.

3. 日本과 北韓과의 關係

미국과의 관계와 유사하게 북한은 일본과의 공식관계는 아직 이루지 못하였으나, 비공식적인 민간인과의 관계는 빈번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일본과의 關係正常化를 위하여 노력했다. 1955년 2월 북한 외교부는 일본과의 평화공존 원칙하에 북한과 일본의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였다. 또한 북한은 외교관계 수립전이라도 쌍방의 이익을 돕는 貿易과

文化交流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같은 북한의 적극적 태도에 비해 일본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이에 실망한 북한은 "人民外交"의 전략을 사용하며, 일본과의 關係改善을 꾀했다. 미국과는 달리, 북한의 대일본 인민외교는 용이한 요소가 있었다. 즉 일본에는 좌경화되어 있는 일본인이 상당수가 있었다. 일본의 사회당, 공산당과 다른 세력의 일부가 북한을 동정하였고 북한은 이들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이들은 평양을 종종 방문하여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곤 하였다. 또한 일본에는 상당수의 朝總聯系 韓國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정책 실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북한의 노력에도 일본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한국정부와 外交關係의 회복이 우선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초점을 돌려 일본정부가 부당하게 일본내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학대하고, 북조선 인민으로서의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함으로써 일본에 거주하는 상당수 한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케다 정부는 政經分離의 原則을 수립하여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적 교류를 증대하였다. 북한의 대일본 무역량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케다 정부는 한국정부와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재개하고, 한국의 안정은 일본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북한은 일본에 대해 東北亞條約機構를 창설하려는 미제국주의의 음모에 일본이 참여하는 작태라고 비난하였다. 동시에 일본의 親北勢力을 가동하여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1965년 韓·日 基本條約은 체결되고, 북한은 일본이 다시 한반도를 침략하려고 한다고 비난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한국은 越南戰에 참가하게 되고 북한과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는 더욱 불편하게 되었다.

1970년도에 접어들면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는 서서히 호전하게 되었

다. 급격히 변하는 국제정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였다. 1971년 11월에 초당적인 친북한 집단인 日・朝 友好促進議員聯盟이 결성되고 대북한 창구역할을 수행했다. 이 집단에 31명에 달하는 일본의 자민당 의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북한의 대일본 태도도 유연성을 보였다. 1973년에 북한은 韓・日條約이 일본과 북한간의 외교정상화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북한과 일본의 교역량도 늘어났다. 문제는 북한이 일본에 대한 채무량이 늘어나 종종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였다. 이 기간에 쌍방 간의 인적 교류도 늘어났다.

1980년대에 특히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다. 일본은 社會黨을 내세워 일본 정부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곤 하였다. 이 정책이 서서히 전환하면서 다케시다 수상은 대북한 협상을 정부차원으로 공식화시키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또한 일본은 북한에 한・일국교 정상화시에 청구권 처리방식으로 북한에 賠償請求權을 인정하고, 경제협력을 할 것을 다짐했다. 북한도 일본과의 합작투자를 피하였으며 합영법 제정이래 북한과의 합작투자의 다수가 일본교포 및 일본인과의 경제협력이다.

1990년에 접어들면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가 급진전하게 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전 부수상인 가네마루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일본의 한국 식민지 통치를 사과하는 가이후 일본총리의 서신을 전했다. 또한 일본 전 자민당 간사장인 오자와가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양국관계 정상화를 합의한 日・北韓 共同宣言의 토대위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정부간 교섭을 신속히 시작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朝鮮日報 1990. 10. 11) 급진전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는 북한에 7년간 억류되었던 후지산호 선원 2명을 석방하는 데 성공하였고 일본과 북한은 3차례에 걸친 차관급 회담에서 公式關係를 모색하였다. 지난 5월 20일에 北京에서 시작한 북한과 일본과의 제3차 회담에서 북한의 전인철 대표는 일본

측에 修交를 먼저하고 후에 賠償을 논의하자는 전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 대표 나카히라는 북한이 국제적인 유엔가입과 南北總理會談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에 납치된 일본 여인의 행방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회의는 결렬되었다.

북한의 대일본 정책을 관찰하면 몇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일본과의 공식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의문스럽다. 둘째, 공식관계 수립에 실패하자 친북한 일본인의 집단을 형성하여 이를 통해 압력을 가했다. 셋째,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입었다. 넷째, 공식관계는 없었어도 일본은 野黨을 앞세워 일본의 의사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하였다. 북한은 이들을 통해 일본의 의사를 청취하고 북한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4. 韓國의 北方政策과 北韓의 美·日關係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共産圈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해 왔으나 이것이 구체화된 것은 6공화국 때부터이다. 1988년 7월 7일 6개항에 걸친 北方政策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한국정부가 천명하였다. 중국, 소련, 그리고 동구의 변화는 정부의 북방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했다. 한국정부와 헝가리 정부는 1988년 11월 25일 공식관계를 수립하고, 1989년 2월 2일에 대사급 외교공관을 설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정부는 폴란드와 1989년 11월 1일 국교관계를 수립하고, 1989년 12월 27일에 유고슬라비아와 공식관계를 수립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와는 각각 1990년 3월 22일과 3월 23일에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같은 정치적 관계의 수립과 더불어 경제적 교역관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0년 한국의 헝가리에 대한 수출은 8천 9백만달러 이상이었고 수입은 2천 3백만달러이었다. 폴란드와는 같은 해에 수출이 1억 1천만달러이고 수입이 9천 1백만달러이었다. 1990년도 유고슬라비아와의 수출은 2억 1천 4백만달러이었으며 수입은 4천 1백만달러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도 交易關係의 발전이 활발했다.

한국과 소련과의 관계 또한 급진전하였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에 소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한국민으로부터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양국간의 노력으로 1989년 4월 3일 소련은 서울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드디어 1990년 9월 30일에 公式國交를 수립하였다. 또한 소련과 한국은 3차에 걸친 頂上會談을 가졌다. 이같은 정치발전에 맞추어 경제관계도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한국과 소련의 交易量을 보면 1988년 한국이 소련에 2천만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1억 8천만달러 어치를 수입하였다. 한국의 대소 수출량이 1990년에는 5억 2천만달러로 늘고 수입은 3억 7천만달러로 감소하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한국과 소련의 상호 인적 교류도 괄목할만 하다. 1988년에 356명의 한국인이 소련을 방문하고 1,879명의 소련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1990년에는 무려 7,014명의 한국인이 소련을 찾았고 5,022명의 소련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국정부는 1990년 3월에 몽고와 수교를 하고, 중국과도 교섭을 하여 1990년 10월에 韓·中代表部 개설에 합의하였고 1991년 1월 30일에 北京에 한국무역대표부를 설치하였다. 공식외교관계는 설립이 되지 않은 데 비해 양국의 무역관계의 발전과 인적 교류는 괄목할만 하다. 1988년 한국이 17억달러 어치를 중국에 수출하고 약 14억달러 어치의 중국상품을 수입했다. 1990년에는 한국이 15억 5천만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22억 7천만달러 어치의 상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한국과 중국의 인적 교류도 대단하여 1988년에는 5,750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3,610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1990년에는 무려 31,934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25,215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았다. 이같은 북방정책의 실현이 정치적 결실을 보게 되었다.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유엔동시가입을 중용하고 核査察을 수용할 것과 남북관계 개선을 중용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성급히 미·일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北方政策의 결과이다. 북한은 군사원조와 대외무역을 소련, 중국 및 공산국가에 의존했다. 북한이

지고 있는 外債중에 소련에 대한 부채가 35억달러이며 군사원조의 대부분을 소련에 의존했다. 한국의 북방정책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외환고갈증을 초래하게 했다. 북한은 이같은 처지에서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같은 입장이 북한으로 하여금 일본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만들었다.

북한이 일본, 미국, 중국, 소련의 요청을 수락해서 한국과 유엔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 결정은 북한이 순전히 外部의 압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 북한의 지도층은 숫한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기에 외부의 압력에 잘 견딘다. 이번 결정은 북한이 유엔가입의 이득과 손실을 계산한 결과이리라 사료되지만 한국의 북방정책이 다소는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5.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

남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발전은 팔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1972년 북한의 김영주와 한국의 이후락이 막후협상을 통하여 유명한 7·4 공동성명을 공표하고, 협상의 정치적 수단으로 南北調節委員會를 형성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의 성립과 더불어 남북을 연결하는 직통전화가 가설되었다. 수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나 별로 성과없이 1979년말부터 행동이 중단되었다. 1980년 1월에 북한 총리인 이종욱이 총리급 회담을 한국 총리인 신현확에게 제의했다. 이후로 수차의 준비위원회가 회동하였으나 별로 성과가 없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3차에 걸친 南北韓 總理會談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는 못하고, 양측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회담과 아울러 남북한이 교류를 원했던 것은 적십자사를 통하여 남북한의 離散家族을 재결합시키는 것이었다. 1971년 8월에 대한적십자사 총재인 최두선이 이산가족 재결합을 북한에 제의함으로써 南北赤十字會談이 진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적십자회담의 결실이 1985년 9월에 이

루어졌다. 남북한은 해방 4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50명의 고향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쪽의 연예인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천하였다. 불행히도 큰 기대 속에서 시작된 고향방문 계획은 계속되지 못하였다.

南北交流의 실천방법으로 경제교류를 들 수 있다. 1984년 10월 북한이 남북교역을 증진하기 위한 회의를 제의하였고 한국은 이를 쾌히 받아들였다. 수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經濟交流는 미미하다. 회의마저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다. 현재까지 제3국을 통한 남북한 교류를 살펴보면, 1988년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1백만달러 어치의 상품을 반입했고, 1989년에는 2천2백만달러 어치를 반입했고,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6만9천달러 어치의 물품을 반입했다. 1990년도에는 한국이 2천만달러 어치를 반입했고, 북한이 4백70만달러 어치를 한국으로부터 반입했다. 1991년 1/4분기에 한국은 3천1백만달러 어치를 북한으로부터 사들였고, 북한은 1천만달러 어치를 한국으로부터 반입했다(한국일보, 1991. 4. 11). 남북한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이는 극히 적은 물량이다.

1985년 4월 북한은 남북한의원단회담을 제의하였고, 또한 軍縮을 위한 회담도 제의하였다. 판문점에서 양측 의원대표들이 수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결과가 없었으며 북한이 다시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하였다. 올해 북한에서 열린 IPU총회에 참석한 한국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의원총회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실이 없었다.

비교적 제한되기는 하였어도 성공적인 것이 남북한의 스포츠교류이다. 지난번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한은 단일팀을 출전시켰고,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이 파견되었다.

회고해 보면 분단의 긴 역사에 비해 남북한 관계개선은 되지 않고 남북한간의 교류 조차도 미온적이었다. 統一을 구호로 외치고 있으나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통해 平和共存의 태도를 수립하고 南北交流를 통해 남북한의 통합을 꾀해야 하는 것인 데, 결

과는 무척 부정적이다. 독일이 통일이 되고, 몰타체제가 수립되어도 남북한의 冷戰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북한이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던 유엔동시가입을 수락하였다.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일본인 기자의 질문에 북한이 국제적 핵사찰도 조건부로 수락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朝鮮日報, 1991. 6. 3). 북한은 미군의 核武器를 한반도에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핵사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다양하며,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되어 있다. 만일 이같은 관계발전이 南北韓 關係改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북한의 미·일 관계개선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 입장과 장기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단기적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긍정적일 수 만은 없다.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體制의 維持와 정권의 순조로운 繼承이다. 통일은 이후의 문제이다. 아마도 유엔가입과 같은 중요한 결정도 79세인 김일성이 후일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려는 의도에서 행하였으리라는 생각도 된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특히 일본이 급히 서두르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를 열거해 보면, 첫째로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비하여 일본은 主導權을 장악해야겠다고 생각하리라 본다. 미국과 중국이 데탕트를 추구하면서 上海 코뮌니케를 발표할 때에도 조용히 있던 일본은 서둘러 중국과 관계개선을 선언하고 중국에게 경제지원을 약속하면서 外交正常化를 이루었다. 둘째는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크게는 국제질서 재조정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이지만 작게는 앞으로 한국을 다루는데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수립하려는 의도가 있다. 셋째로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은 체제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다. 주지하듯이 북

한은 經濟難에 직면하고 있다. 식량마저 부족하고 原油供給이 부족하여 군사훈련의 시간을 줄이고 있다. 북한은 전투기는 700대 이상이나 보유하고 있으나, 석유의 부족으로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이 부족하다. 북한은 무역을 주로 사회주의국가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최근 소련은 북한에 원유공급을 줄이고 있다. 이같이 곤경에 처해 있는 북한은 또한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孤立狀態에 있다. 이같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문제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 관계개선에 응하게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이같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며 門戶를 開放하게 하면 독일식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기술보조는 이같은 과정에 쐬기를 박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경제 및 기술보조를 받고 미국과 협상하여 북한에 묻혀 있는 8천 이상의 6.25 전쟁시 실종된 美軍의 운구를 미국에 돌려줄 수가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경제보조로 식량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기술로 생산된 상품과 북한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한 보세가공품은 방대한 미국시장과 후진국에 염가로 수출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이 국제시장을 겨냥한 시장개척 전술이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보조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곡물을 이용한 알코올 에너지개발에 사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군사연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같이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면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開放하지 않으면서도 유지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獨逸統一의 결과로 역설적이지만, 북한 엘리트들은 개방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현재 동독의 전직 당간부, 군인, 교수 등 많은 인구가 통일후 직업을 잃고 있다. 북한 엘리트들에게 급속한 南北韓交流가 반가운 것이 못된다. 이같이 입지가 강화된 북한이 남북한 관계개선에 얼마나 적극적일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행위는 남북한 관계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한국정부는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일본의 북한경제 및 기술원조가 북한의 軍事力을 도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경제보조는 진행되는 남북한 관계개

선과 병행해야 된다. 셋째, 북한은 일본의 보조를 核武器 發展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넷째, 북한은 테러행위를 증지해야 된다고 했다.

만일 이같은 전제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미·일 관계개선이 남북한 관계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정부는 계속 일본·미국정부와 對北關係를 협의하여 조절해야 하겠다. 만일 이것이 실패하면 남북한 관계의 冷戰은 당분간 계속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은 남북한 관계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이같은 논리의 근거는 첫째, 북한이 미국과 일본의 경제보조를 받아들이고 자체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외국과의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 많은 일본인과 미국인이 북한에 가고, 북한인이 이들 국가를 방문해야 한다. 아무리 북한이 중국식 방법을 추구해도 사람이 왕래하면 개방적으로 될 수 있다. 둘째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된 북한의 상품을 방대한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海外同胞와 잦은 교류를 하게 된다. 해외동포는 자유분방한 곳에서 살던 사람이다. 북한주민들이 이들과 접촉하는 동안 체제를 비판하게 되고, 한국의 실상을 공정히 파악하게 된다. 셋째, 북한의 경제발전과 해외로의 진출로 북한주민들은 國際慣行을 배우게 된다. 국제관행을 배우면서 호전적인 태도를 수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남북한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유도해야겠다. 이는 政權的 次元의 문제가 아니라, 國家的 次元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유엔加入 以後의 南北韓 關係: 展望과 問題點

韓 英 鳩 (外交安保研究院)

1. 序 論

한국정부는 韓·蘇修交, 韓·中貿易事務所 相互設置, 東歐諸國과의 수교 실현 등 148개국과의 外交關係 樹立을 배경으로 유엔가입 분위기가 성숙되었다는 인식하에서 한반도의 平和統一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平和定着追求의 일환으로서 금년도에 유엔가입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유엔加入政策은 물론 南北韓 同時加入을 우선으로 하더라도, 세계 17위의 GNP 규모 및 세계 12위의 貿易去來 規模를 갖추고 15개 유엔專門機構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國際平和와 安全의 유지 및 국제협력분야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유엔의 諸活動에 참여하여 국력에 상응하는 國際的 地位의 제고를 꾀하려는 의미에서도 北韓에서 同時加入에 반대할 경우 韓國이 먼저 유엔에 加入한 다음 北韓의 가입을 적극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27일 北韓은 外交部 聲明을 통하여 유엔加入 意思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決定은 한국의 유엔가입시 “유엔무대에서 전 조선민족에 이익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그로부터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조치”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성명에서 볼 때, 이번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그동안 한국정부의 유엔가입 실현노력에 의한 北韓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상호 事前協議에 의한 同時加入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남북한이 각

각 유엔에 가입을 신청하여 시기적으로 동시가입을 이루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될 경우, 북한이 유엔가입을 결정한 배경과 관련하여 볼 때 남북한 간에 유엔가입후 유엔내에서의 相互關係 및 活動에 관한 協議體制를 이루게 되기까지의 기간동안 競爭, 對決的 關係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유엔가입이 남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유엔體制의 特性과 관련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2. 南北韓의 유엔加入政策

(1) 韓國의 유엔加入政策

韓國의 유엔가입정책은 1948년 政府樹立以後 크게 3시기로 나누어論할 수 있다. 즉 정부수립이후부터 1973년 한국정부가 6·23 宣言을 천명하기 이전까지 추구했던 單獨加入政策, 6·23 선언 이후부터 1980년까지의 북한의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책, 그리고 1980년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南北韓 同時加入 등에 의한 북한의 유엔가입을 적극 촉구하는 자세를 취하는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첫번째 時期에 있어 한국정부는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감시하에 행해진 總選舉를 통하여 수립된 후, 동년 제3차 유엔總會에서 合法的인 政府로 承認받아 다음 해 1월 19일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951년 12월 22일과 1961년 4월 21일 再審申請으로 유엔安保理에서 한국의 가입이 토의되었으나, 매번 소련의 拒否權 行使로 부결되었다. 이 시기는 東西冷戰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서 당시의 유엔은 미국 등 西方側 國家들이 압도적 다수를 점했던 상황하에서 한국의 유엔單獨加入이 추진된 것이었다.

1970년대 초 美·中데탕트, 美·蘇間 軍縮의 부분적 타결 등 東西데탕트 움직임 속에서 남북한은 1972년 7·4 共同聲明을 통하여 상호 적대시

하지 않고 對話를 통하여 統一實現을 위하여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정부는 1973년 6월 23일 “平和統一外交政策에 關한 大統領 特別聲明”을 發表,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함께 國際機構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統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1975년 7월 29일 한국정부는 共產베트남에 의한 南·北베트남의 유엔가입신청 직후 네번째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安保理에서 議題로조차 채택되지 못했으며, 동년 9월 21일의 再審要請도 역시 같은 결과에 그치고 말았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韓半島의 平和統一을 위한 基盤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韓半島 平和定着過程의 한 단계로서 유엔동시가입을 제의했으나, 북한의 반대와 함께 유엔安保理의 常任理事國인 蘇聯과 中國의 북한입장 지지로 그 가능성이 적었던 점에서 유엔가입 보다는 中·蘇와의 關係改善을 모색하는 의미의 北方政策을 적극 추진했다.

한국정부가 유엔가입을 적극 모색하는 시기는 1988년 노태우 大統領에 의한 7·7 特別宣言으로서 동선언에서 “남북간의 소모적인 競爭, 對決外交를 終結하고 北韓이 國際社會에 發展的 寄與를 할 수 있도록 協力한다”고 천명, 북한의 開放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國際社會에 나오게 하며, 동북아 安定과 世界平和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유엔동시가입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유엔同時加入政策은 작년 9월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중국과 相互 貿易代表部 설치에 합의함에 따라 그 실현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적극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 北韓의 유엔加入에 대한 態度

북한의 유엔가입에 대한 입장도 1973년 한국의 6·23 宣言을 전후로

하여 변화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1973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의한 유엔가입신청서 제출 또는 소련을 통한 南北韓 同時加入案 제출 등 4회에 걸쳐 유엔 가입을 시도한 바 있다. 즉 한국이 제1차 加入申請案을 제출한 20여일후인 1949년 2월 9일과 1952년 1월 2일(한국은 1951년 12월 22일 제출) 2회에 걸쳐 유엔가입을 신청했으며, 1950년대 2회(1957년, 1958년)에 걸쳐 蘇聯에 의해 南北韓 同時加入案이 제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북한이 남북한의 동시가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유엔에 의한 總選舉 拒否, 韓國戰爭 挑發 등으로 실추된 북한의 지위를 높여 한국에 대한 외교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엔가입신청은 유엔憲章上의 義務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韓國戰爭과 관련하여 안보리에서 침략자로 규정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소련을 제외한 安保理 理事國의 압도적 반대로 議題로 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1950년대 북한의 유엔가입 추진입장은 1973년 한국정부가 북한의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政策의 표명과 동시에 유엔동시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1973년 6월 23 김일성은 “조국평화통일 5대강령”에서 “……분열이 고착되어 우리나라가 두 개의 조선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한 바와 같이 유엔동시가입정책을 “두 개의 조선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聯邦制 실현 이후 單一國號에 의한 유엔가입을 주장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世界保健機構(WHO)에의 가입을 실현, 유엔의 옵저버 자격을 얻었으며 이에 따른 자신감, 베트남 戰爭의 종결, 1970년대 非同盟그룹의 세력확장으로 한국과의 同時加入을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주도에 의한 高麗聯邦制의 성립후 단일국호로 가입하자는 案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정부가 유엔가입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분

斷의 固着化라는 이유를 계속 제시하면서 통일 이전에라도 남북한의 單一議席에 의한 가입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同時加入 또는 한국의 單獨加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단일의석에 의한 공동가입안은 종래의 통일후 單一國號에 의한 가입만을 주장했던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즉 북한은 단일의석의 가입이라는 점에서 變化는 없으나, 統一後의 가입에서 統一前의 가입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최근 日·北韓 修交交渉會議,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의 修正可能性 제시 등에서 나타났으며, 결론적으로 5월 27일의 유엔가입결정 발표로 압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유엔加入과 南北韓 關係

앞에서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대한 입장을 검토한 바와 같이 남북한은 유엔가입에 있어 상호 反對되는 입장을 취해 왔다. 1973년 이전까지는 한국이 單獨加入, 북한이 同時加入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1973년 이후에는 한국이 동시가입, 북한이 단일국호에 의한 가입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이 동시가입과 단독가입을 상황에 따라 병행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취함에 따라 북한은 동시가입을 택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동안 “분단의 고착화,” “두 개의 조선책동”이라는 同時加入의 반대이유는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한국정부가 先平和定着, 後平和統一이라는 점에서 추진해 온 동시가입 추진이유의 타당성이 부각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유엔가입후의 남북한 관계가 유엔體制의 特性과의 關係하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점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유엔동시가입에 대한 “두 개의 조선책동” “분단의 고착화”라는 반대이유는 유엔加入資格이 主權國家에만 부여되는 점과 관련하여 남북

한이 함께 세계적인 政治舞臺인 유엔에 가입하게 될 경우 韓半島에 두 개의 國家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주권국가로서 인정되고 있다. 남북한은 90개국과 함께 外交關係를 수립하고 있으며, 유엔을 제외하고 11개 유엔 專門機構 등 많은 國際機構에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주도 하의 多數國間 條約에도 署名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상대방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유엔에 가입할 경우 그 국가와 모든 유엔 會員國과의 承認關係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즉 유엔加入 自體가 유엔 會員國에 의한 新加入國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아랍諸國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이다. 1950년 12월 유엔에 의한 會員國의 代表權 容認에 관한 總會決議에서 “당해국과 유엔 會員國 간의 직접적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으나, 유엔 관행상으로는 非會員國의 유엔가입에 贊成投票를 행한 국가의 경우는 신 會員國에 대해 默示的 承認의 효과를 가지며 가입에 반대한 국가의 경우는 신 會員國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따라서 유엔 會員國도 상호 承認關係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그 자체로서 상호 국가로서의 承認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 예로서 1973년에 가입했던 東西獨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유엔가입에 적극적이었던 동독은 서독과의 基本條約 체결로 상호 승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서독은 이 조약의 체결에 있어 동독을 승인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으며, 이는 유엔가입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 5월 20~22일의 제3차 日·北韓 修交交渉會談에서 북한의 관할권이 韓半島의 “절반”에 미친다고 인정했으며, 5월 27일

外交部 聲明에서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유엔성원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시도가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함으로써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현실을 자인한 것이다.

또한 東西獨이 각각 유엔에 가입한 다음 統一을 이루어 하나의 議席이 인정된 바와 같이 유엔憲章上 유엔회원국들이 하나의 국가로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東西獨, 南北에멘, 아랍聯合共和國(1958년 이집트와 시리아) 등과 같이 複數의 회원국이 하나의 國家로 統合되었을 때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만으로 자동적으로 회원국으로서의 地位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統一을 이루었을 때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通告만으로 하나의 의석이 인정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유엔현장상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諸義務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유엔회원국은 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 금지, 紛爭의 平和的 解決, 國內문제 不干涉 등의 의무를 지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유엔이 결정하는 군사적, 비군사적 측면에서의 援助 및 制裁措置에의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은 유엔가입후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삼가야 하며, 緊張緩和를 위한 평화적 방법의 추구, 상대방 敵對視政策에서 탈피하여 內政不干涉에 의한 상호 존중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들은 남북한 간에 相互不可侵의 原則을 확인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緊張緩和, 평화정착을 통한 平和統一의 조건을 조성하는 계기를 형성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유엔體制內에서 한반도에 平和體制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각각 未修交關係에 있는 중국,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일본과 수교교섭 중에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安保理 常任理事國인 미국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미국의 默示的 承認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유엔가입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승인은 별개라고 언명한 바 있으며 미국이 현재 적극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核査察 受容 및 核保有 可能性 排除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사찰 수용문제는 日・北韓間 수교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에서 북한은 유엔가입 이전에라도 핵사찰을 수락할 가능성이 크나, 그렇다고 해서 美・日이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북한의 유엔加入條件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유엔가입이 곧 美・일의 對北韓 關係正常化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북한의 유엔가입은 美・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계기를 조성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소련과 이미 외교관계를 수립한 한국의 경우, 유엔가입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正常化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한이 유엔에 함께 가입하게 됨으로써 韓・中 간의 承認關係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며, 외교관계 수립에 있어 “북한”이라는 장애요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남북한과 周邊4強과의 관계개선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한편 남북한과 주변4강과의 관계개선을 이루는 중요한 契機를 만들 가능성도 크다. 이는 今後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여 한반도의 緊張緩和, 平和定着에 기여하는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떤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즉 유엔내에서 남북한이 相互協調體制를 이룰 것인지 또는 對決, 競爭關係를 지속할 것인지는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현재 북한은 유엔가입을 단독적으로 申請할 計劃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현재로서 북한의 유엔가입의도는 명백히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당분간 한국과 對決的 姿勢를 취할 가

능성을 크게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한이 유엔가입으로 한반도의 平和共存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게 될 경우, 나아가서는 東北亞 新秩序構築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고 동시에 分斷國으로서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상호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能動的인 役割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 간의 상호불신, 적대감이 계속될 경우 남북한은 동북아 신질서구축과 관련하여 論議의 대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유엔가입을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平和體制構築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경우, 남북한은 동북아의 새로운 秩序構築에 있어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유엔내 각 분야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機會를 가짐으로써 對內發展을 꾀하고 對外活動의 영역과 내용을 확대시킬 것이며, 따라서 그 國際的 位置도 제고될 것이다.

특히 脫冷戰時代에 있어서 世界平和와 國際的 協力이 유엔體制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다른 유엔 회원국과의 교류·협력의 확대, 世界平和의 유지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조증진, 비정치적 분야, 즉 經濟, 環境, 資源, 人權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증대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유엔의 활동을 통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남북한 간의 상호이해와 협조의 정신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4. 結 論

유엔가입후의 남북한 관계는 유엔加入形態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상호합의에 의해 유엔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관계는 平和統一을 위한 여건의 조성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정착

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비해, 상호 어떠한 승意도 없이 유엔이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協調的 關係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後者의 경우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 되겠는데, 유엔가입 이후라도 남북한이 相互協調關係를 이룰 것에 합의할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현시점에서 볼 때,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각각 별개로 유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同時期에 유엔가입이 실현될 전망이다. 현재로서 남북한은 유엔가입에 관하여 어떤 승意를 이룰 가능성은 적으며 따라서 유엔가입후에도 유엔내에서 각각 별개의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5월 27일 外交部 聲明에서 유엔가입후 남북한이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의식을 차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韓半島의 統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유엔무대에서 조선의 통일문제와 국제문제들이 우리 민족의 이익과 세계평화와 안전의 요구에 맞게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의 유엔가입이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인하여 조성된 情勢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같이 남북한이 별개로 유엔에 가입하게 된 “비정상적인 사태”는 統一實現에 있어 “또 하나의 커다란 난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난국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과 막을 수 없는 통일전망에 의하여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유엔내에서 民族의 利益과 世界平和 및 安全의 요구에 맞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統一問題와 國際問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民族의 利益, 國際平和 및 安全에 합치되는 統一과 북한이 의미하는 통일은 어느 정도 일치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修正可能性 提示, 한반도의 “절반”에 대한 북한의 관할권 認定 등 이전에 비해 상당한 態度的 變化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한국과 별개로 유엔에 가입하게 된 배경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인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不可避한 것이며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난국의 극복”을 위한 것이라면 민족의 이익, 세계평화 및 안전에 합치되는 統一問題에 대한 남북한의 견해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북한은 유엔내에서 “난국의 극복”을 위하여 한국에 대해 攻勢的 態度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유엔加入 決定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상호실체의 인정, 平和共存의 가능성 제시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平和共存政策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平和統一實現을 위한 與件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민족의 이익, 세계평화 및 안전에 합치되는 統一問題에 관하여 상호 見解의 差異를 좁히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이라는 世界政治舞臺에서 남북한의 상호 협의, 협조하는 체제를 이루어 平和統一의 可能性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엔이 萬能의 機構는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유엔회원국 간에 武力行使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해결이 반드시 유엔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體制를 통한 韓半島의 平和體制構築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安保問題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第 2 會議 討論

유 세 회 교수(사회) : 민족통일연구원의 회의 주제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 같다. 특히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주변 4강의 對韓半島政策, 그리고 유엔가입 이후의 남북한 관계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얼마전 소련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가했던 南北韓을 담당하는 한 실무자로부터 북한이 일 분, 아니 단 일 초도 남한에 뒤져 유엔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정확히 남한과 동시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두 분의 발표는 제목은 조금 다르나 남북한 유엔同時加入이 가시화되는 상황하에서 어떤 점에서는 같은 의미를 다룬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주변 4강의 남북한에 대한 交叉承認이 거의 공식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北方政策 내지 對北政策이 특히, 북한이 유엔가입을 받아 들임으로써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유엔동시가입이 안되는 상황에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두 분의 발표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국내문제, 북한의 국내문제, 우리와 우방국가와의 관계 등에서 그간 간과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그럼 먼저 고병철 교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

고 병 철 교수(지명토론) : 한영구 교수의 발표는 균형이 있고 신중하면서도 설득력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엔이 萬能의 機構가 아니라고 지적한 사실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과대평가하는 입장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은 한국으로 볼 때 당연히 자축할 만한 外交的 勝利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북한정책의 現實適應能力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통일에 유익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북한은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外交的 政策調整 내지 戰術適應을 해 오고 있다. IAEA 核査察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가 그 좋은 예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겠다. 아울러 금번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에서 북한정책의 非效率性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과거 북한은 유엔가입문제를 한국에 대한 하나의 협상카드로 사용해 왔는데 한국과의 향후 不可侵宣言 등의 협상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한영구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하자면, 한영구 교수는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相互承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해도 相互承認效果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법상 默示的 承認이 성립하려면 양국간의 雙務的 協定이 체결되어야 하고 외교공관의 설치가 있어야 한다. 묵시적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승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엔회원국과 옵저버國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북한이 유엔 밖에서 유엔 안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유엔은 옵저버國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관측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신청을 하면 발언이 가능하다.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유엔연설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lan: UNDP)의 대표가 평양에 상주하고 있다. 옵저버國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회원국과의 접촉을 가질 수 있다. 정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국가의 위상이 제고되고 남북한 접촉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정회원이 되면 한국 국민이 유엔사무국 직원이 될 수 있는 利點도 있으나 각국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財政負擔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남북한 간의 묵시적 인정은 그간의 대화 등으로 이미 성립된 것이라고 본다. 다만 基本協定 등과 같은 명시적 협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영구 교수는 남북한이 유엔의 정회원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제기

될 유엔軍司令部(UNC)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북한군간의 敵對關係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을 묻고자 한다.

임용순 교수의 발표 가운데 최근 유엔가입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 이유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입장변화가 한국내 在野勢力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오히려 이것이 재야세력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사 회 : 다음으로 정진위 교수의 논평을 듣기로 하겠다.

정진위 교수(지명토론) : 발표하신 두 분의 논문은 균형이 잡혀 있는 좋은 논문이라 생각된다.

북·미, 북·일관계는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래전 부터 미국의 對北韓 關係改善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核安全協定 체결 및 核査察을 수용하면 테러리즘, 북한의 인권문제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본다.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외교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敵과 友邦의 구별이 어려워질 것이며 사방에서 압력이 가해져 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방과의 돈독한 유대 속에서 安保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으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 우방과 적이라는 관계의 도식에서 벗어나 이제 獨自의 외교·안보·경제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駐韓美軍 철수문제를 포함, 유엔군사령부 문제가 제기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문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불가침협정 체결문제, 韓半島 軍縮問題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금번 북한측의 核協定締結 및 核査察 수용입장 표명, 유엔가입결정 등과 같이 향후 북한이 조금씩 양보 내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경우에 대한 사전 대비책 강구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한국에 “즐거운 비명”이 될 수도 있으나 과연 우리가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國民的 合意가 있겠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롭게 정립되는 동북아 질서에서 주변 4강 가운데 일본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軍事力 및 外交力이 탈냉전과 더불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본의 영향력은 대단히 확대 내지 강화될 것이며 주변 4강 간의 세력 다툼 내지 영향력 다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으로서는 이에 따른 상당히 “高次元의인 外交”가 필요하며 이에 대비한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영구 교수의 발표에서 1950년대 북한의 유엔가입 추진입장을 1973년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 설명을 하거나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영구 교수는 남북한이 향후 경쟁적, 대결적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해서도 비록 거칠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인내, 설득, 관용의 차원에서 대해야 하며, 우리부터 대립과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영구 교수께서 1973년 독일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독일문제와 관련하여 南北韓 基本條約 문제도 다루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사 회 : 마지막 지명토론자인 민족통일연구원의 이달희 박사의 코멘트를 듣기로 하겠다.

이 달 희 실장(지명토론) : 두 분의 발표와 두 교수님의 토론이 너무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의 발표를 부정적으로 보려고 한다.

한영구 교수와 임용순 교수의 논문을 읽은 느낌은 너무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어 최근 일련의 북한 대외정책상의 변화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다. 임용순 교수의 경우 용어의 사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南北韓 關係라는 것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용순 교수의 논문은 북한이 왜 미·일에 접근하는지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왜 미·일이 북한에 접근을 하는지를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분석이 없이 남북한 관계에 연관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장단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과연 미·북한 및 일·북한 수교가 어느 정도 빠르게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 전망하고 그 이유를 밝혀 주었으면 한다.

보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남북한 간의 平和共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영구 교수에게 묻고 싶다.

사 회 : 세 분 지명토론자의 질문과 코멘트가 있었다. 임용순 교수께서 먼저 지명토론자의 질문이나 코멘트에 답해 주기 바란다.

임 용 순 교수 : 북한의 입장 변화가 한국내 재야세력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라는 고병철 교수의 지적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달희 박사의 지적에 동감이다. 미·북한 및 일·북한 수교는 3~5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일성이 자기 생존시 아들을 위해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修交를 빨리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 회 : 다음으로 한영구 교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다.

한 영 구 교 수 : 엄밀히 국제법상으로 말해서 유엔가입만으로 承認效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행상 가입에 찬성하면 묵시적인 승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유엔가입에 찬성은 하지만 승인을 유보할 경우, 묵시적 승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實體認定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실체인정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관련 남북한 간의 휴전협정체제가 平和體制로 대체되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 기본관계조약 및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북한의 급속한 변화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는 70년대 중반이후 유엔총회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유엔군사령부의 설립이 유엔安全保障理事會의 결의에 의한 것이니 만큼 해체결의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경우 休戰協定問題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不可侵協定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憲章은 불가침을 회원국의 권리·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휴전협정내에도 불가침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북한이 휴전협정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면서 한국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애매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문제는 실질적 당사자 간에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상호 연구하고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안보상 매우 중요하다. 금번 걸프戰 당시 美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War Powers Act를 결의한 바 있다. 해외에서의 전쟁 발발시 의회의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90일 이내에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美軍을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유엔 군사령부의 경우 美 의회에서 War Powers Act를 결의할 때 내용상에 있어 고위급 사령부는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유엔 군사령부의 존재는 友邦國들의 한국안보에 대한 개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엔 군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이러한 개입보장 효과가 소멸되기 때문에 平和體制와 安保體制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 회 : 두 분의 발표 뿐만 아니라 세 분의 지명토론자들의 논평에 대한 질문이나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은 미진한 것 등을 청중석에서 질문해 주기 바란다. 먼저 송영선 박사의 코멘트를 듣기로 하겠다.

송 영 선 박사 : 북한의 核査察 問題에 대한 임용순 교수의 견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임용순 교수는 북한의 유엔가입결정과 核査察 수용의사 표명이 북한의 현실적응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조건부 핵사찰수락은 금년 6월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1988년 IAEA가 151개국과 체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칙으로 북한과 核安全協定을 체결하기를 원했지만 북한이 세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북한의 核開發을 억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조건있는 핵사찰 수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政治的인 武器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 회 :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몇 분의 말씀을 더 듣기로 하겠다.

윤 근 식 교수 : 몇 가지 원칙적인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갑작스런” 유엔가입신청결정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 전술적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북한이 현 국제정세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가? 셋째, 우리는 북한의 입장변화를 교육지책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북한이 東北亞 秩序再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건이 성숙했다고 생각할 경우 이러한 전술적·정책적 결정이 동북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 회 : 미국에 계신 길영환 교수의 코멘트를 듣기로 하겠다.

길 영 환 교수 : 임용순 교수의 논문에서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다. 임용순 교수는 일본이 북한에 대해 경제·기술 지원을 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북한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에 수출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하는 점이다. 북한이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겠는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은 협조적 관계도 있겠지만 경쟁적 관계도 있다고 본다. 북한의 對美·日 關係를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三角關係에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 회 : 아이오와 주립대에 계시는 길영환 교수의 코멘트를 들었다. 주로 임용순 교수 논문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것 같다. 임용순 교수의 답변을 부탁드린다.

임 용 순 교수 : 북한은 대내외적 조건을 고려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북한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核武器를 철수하게 한다면 전술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북한 뿐만 아니라 소련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위협이 감소되고 있고 미국이 한국의 國防力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내 핵무기를 철거할 것으로 믿고 있다.

북한의 對美·日 關係를 삼각관계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길영환 교수의 지적에 동감이다. 다만 편의상 북한의 대미·일 관계를 따로 떼어서 보았다. 그리고 북한 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은 어렵기는 하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고병철 교수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한다.

고 병 철 교수 : 북한이 核安全協定 체결의사를 표명한 것은 속임수는 아닌 것 같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더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核問題와 관련해 중국은 核擴散禁止條約(NP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IAEA에는 가입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IAEA와의 핵안전협정 체결 문제는 유엔가입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 회 : 북한의 핵문제 및 유엔가입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자가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북한이 최근 대외정책상 큰 실수를 범한 것은 核開發 문제이다. 핵개발은 소련은 물론 중국도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대북한 지원에 있어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하여 서울주재 중국무역대표부의 설치를 반대했지만 중국은 무역대표부 설치를 강행하였다. 북한의 유엔가입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中·蘇의 戰略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겠다. 북한의 유엔가입결정과 관련하여 북한이 주변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한영구 교수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기 바란다.

한 영 구 교수 : 한국의 北方外交 특히, 한·소 수교 및 한·중 수교의 가시화와 관련 북한은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 특히 그러한 외교적 수세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유엔가입을 계기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 회 : 약 10분 가량 남아 있는 것 같다. 유재갑 교수의 코멘트를 들기로 하겠다.

유 재 갑 교수 :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과의 협상을 목표로 한 고도의 계산된 策略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미국과의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核카드의 효용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핵안전협정 체결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이 한국내에서 美軍이 보유

하고 있는 核武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을 다루기 위한 북한의 고도의 책략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사 회 : 오늘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임용순 교수와 한영구 교수, 그리고 좋은 코멘트를 해 주신 고병철 교수, 정진위 교수, 이달희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토론에 참가해서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2 회의에서 미진한 부분은 제 3회의 종합토론에서 다루었으면 한다. 이것으로 제 2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빈 면

第 3 會議(綜合討論)：統一問題研究의 統一政策의 方向

- 司 會：丁 世 鉉 (民族統一研究院 副院長)
- 討論者
 - 金 惠 (外國語大 教授)
 - 安 秉 俊 (延世大 教授)
 - 李 昊 宰 (高麗大 教授)
 - 崔 宜 喆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長)
 - 李 達 熙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빈 면

第3會議：綜合討論

정세현 부원장(사회) : 統一問題의 연구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기방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통일문제를 둘러싼 여러 國際環境이 급작스럽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해 民族統一研究院法이 통과되고 금년 1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4월 9일 開院하였다. 개원 이후 한반도 주변 國際環境이 더욱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의 토의주제를 “統一問題研究와 統一政策의 方向”으로 잡은 까닭은 통일문제연구가 이러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구되어야 하는, 매우 실천적인 학문분야로 여기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도 때문이었다. 물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은 기존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며,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가하는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제1 회의 및 제2 회의의 내용을 토론에 각각 참여하였던 본 연구원의 최의철 정책연구실장과 이달희 북한연구실장이 약 10분 정도 요약하여 보고하고 그 토대 위에서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다. 그럼 먼저 제1회의 “東北亞 4強과 韓半島”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최의철 실장의 보고가 있겠다.

최 의 철 실장(제1 회의 보고) : 제1 회의에서는 한반도 주변환경, 특히 탈냉전시대에서의 미·소 및 중·일의 대한반도 정책, 즉 군사 내지 정치외교정책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박영규 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현재 국제정치상에서의 脫冷戰化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동북아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지역적 특색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 등으로 그리 쉽지 않다. 당분간 미국은 이 지역에서 均衡者, 安定者의 역할을 지속

할 것이며, 소련의 군사, 정치, 외교적 도전을 견제할 것이라는 것이 박영규 실장의 발표내용이었다.

박영규 실장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제고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유엔가입 등을 통한 平和攻勢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공세로 국민들의 안보개념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견제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박영규 실장의 발표요지이다.

정중욱 교수의 발표는 군사·전략적인 면에서 미·소의 입장을 박영규 실장의 요지와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중·일의 역할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상당히 부각될 것이며, 한반도 정책에도 주변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미국이 유일한 超強國으로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영향력을 너무 강하게 투영할 것을 우려하여 현재 對蘇接近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견제책을 보이면서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勢力均衡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정책에 있어 중국은 국내정치·경제적 요인과 여러가지 지역요인 및 국제요인 등으로 당분간은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유엔가입을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이 부각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이해관계는 다르나, 自國利益을 위해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現狀維持를 통해 남북한에 공히 정치·외교·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향후 經濟大國에 상응하는 政治大國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것이며 한국이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요지로 발표하였

다.

박경서 교수와 구종서 논설위원 그리고 기타 청중석 토론자들의 요지는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주변 4강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예측, 통일정책추구에 정책적 지침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미국의 對東北亞 戰略, 특히 대한반도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앞으로 남북한 문제 궁극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침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 4강의 韓半島 核問題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정책이 거론되지 않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셋째, 구종서 논설위원은 현재 국제정치가 당분간 현실적 의미에서 한반도 및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부정적으로 투영된다는 견해에 대해, 이러한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현 국제정치질서 특히 대북방 및 대남방외교를 이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여러 의견에 대한 박영규 실장과 정종욱 교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아·태 및 동북아, 특히 韓半島 軍事戰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특히 걸프戰 이후 地域紛爭에서 군사적인 작전의 결점을 보완하는 변화가 있을 뿐이며 탈냉전시대에 있어 미국의 軍事戰略이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소련도 亞·太에서의 자국의 안보를 위해 유럽에서와는 달리 앞으로 상당히 미국과 대립·경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核問題, 특히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해서는 많은 국내학자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며 美·北關係에서 이 문제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駐韓 美軍 철수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박영규 실장은 美軍撤收는 핵사찰문제와 연결되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길영환 교수는 미국의 정책이 박영규 실장의 생각보다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국도 신속히 변화하는 국제정치에 대응하는 고차원적인 대미 및 대우방 외교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욱 교수의 발표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 가운데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더 부정적이지 않은가하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종욱 교수는, 이러한 견해는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연구해야 할 좋은 연구과제라고 언급하고, 향후 일본의 대북한 접촉과 대한반도 정책을 좀 더 심도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의 탈냉전화, 미·소의 화해는 유럽에서 상당히 생산적인 결과를 거두었지만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에서는 당분간 성급한 기대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하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향후 미·소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형적으로 표출된 그리고 미국의 政策的 宣稱만 가지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미·소간에 어떠한 협상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우리의 북방외교, 대미외교 그리고 대우방외교가 중심을 잃지 않고 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統一外交나 統一政策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소의 대한반도정책 또한 대아·태정책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면 우리에게 상당한 비용을 안겨줄 것이다.

사 회 : 다음은 제2회의 “南北韓關係의 發展方向”에 대해 이달회 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다.

이 달 회 실장(제2회의 보고) : 먼저 임용순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면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의도를 지적하고,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러한 북·미, 북·일관계가 남북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體制維持 強化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변화가 북한사회의 開放化를 촉진해서 남북한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임용순 교수는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에 대한 의도를 분석하는 가운데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에 따라 한국내에서의 반체제 운동권의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 대해 고병철 교수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정진위 교수는 임용순 교수가 언급한 것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한의 대미·일 접근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북·미관계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미 북한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정책을 2~3년 전에 이미 결정한 것은 아닌가 하고 지적하였다.

한영구 교수는 유엔가입 이후의 남북한 관계에 있어 유엔가입의 형태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협의에 의해 가입하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남북한은 개별적으로 가입할 것이며 이 경우 南北韓은 유엔에서의 개별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경우에서 북한은 난국의 극복을 위하여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유엔가입은 한반도에서 相互實體認定, 평화공존 가능성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平和共存政策을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유엔이 萬能의 機構는 아니며 유엔에 가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고병철 교수는 유엔이 만능기구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北韓外交의 現實適應能力을 높게 평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정책의 非效率性도 지적하였다.

정진위 교수는 결국 유엔가입이 상호협의로 보았을 때, 독일의 선례처럼 유엔가입 이전에 먼저 基本條約과 같은, 상호 합의해야 할 문제가 논문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엔가입 이후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지워지게 될 것인 바, 주한미군 철수문제, 비핵지화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청중석에서 지적된 문제들 가운데 먼저 송영선 박사는 북한의 IAEA 핵안전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북한의 진의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유재갑 교수도 지적한 바 있다.

길영환 교수는 북·일 및 북·미 관계를 三角關係에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상품이 언젠가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느냐는 임용순 교수의 논지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가 아닌가 하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윤근식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는 바, 결국 북한의 유엔가입 또는 대미·일 접촉과 관련하여 북한의 전략적인 의도와 전술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규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지금까지 요약한 것과 관련하여 본인이 느낀 것은 북한의 대

외정책변화가 전략적인가, 전술적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북한은 對外政策 變化와 대남정책 변화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문제로 북한의 유엔가입선언이나 대미·일 접촉진전이 정부로서는 특히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논의가 핵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전반적인 安保問題가 토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 회 : 방금 들으신 대로 오전 회의와 오후 회의 전반부에서 논의되었던 여러가지 의견과 몇가지 합의에 도달한 점, 그리고 논쟁속에서 결론을 얻지 못한 점이 명료하게 분류되어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졌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 종합토론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회의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나 반론을 제기해 주기 바란다. 오늘 종합토론 제목이 統一問題研究와 統一政策의 方向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통일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해 나가는데 있어 어떤 관점이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시급히 연구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주었으면 한다. 먼저 김덕 교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 덕 교수(지명토론) : 북한의 정책변화를 고도의 계산된 술책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북한 정책결정자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북한의 일관성, 비전, 예견력을 과장한 것이다. 북한의 정책변화는 危機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現實對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 연구에 대하여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통일문제 연구는 성격에 있어 國際問題인 동시에 民族問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일연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치우친 편향적 연구경향이 있었다. 정치적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국제정치학자 중심의 연구와 民族史觀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분단사학자의 입장 간의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경향의 편향성을 시정하고 균형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 연구도 強大國의 정책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편중된 연구가 되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향후 그간 피상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던 日本에 보다 초점을 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 사회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북한 사회의 모든 측면에 관한 자료축적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간 북한의 엘리트에 대한 데이터 축적노력을 소홀히 해왔다. 북한의 엘리트 동향연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사회학자들의 북한연구도 장려해야 할 것이다.

統一問題는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그간 分斷解消의 과정에 역점을 두어 왔지 分斷管理問題는 소홀히 해 왔다. 군사문제 연구가 좀 더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는 어디까지나 政策研究로서 예측과 처방의 문제이다.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역사가 일천하므로 先例研究에서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분단국통일의 선례연구 특히 統獨研究를 통하여 한반도 통일에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통일은 의외로 빨리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바, 통일의 시기 및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작성이 중요하다.

통일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국민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연구소가 새로 생기면 가시적인 연구업적에만 연연하여 증거만 남기려 하는 경향이 있는 바, 기본 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중심으로한 資料蓄積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統一方法論의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체계적

이고 일관된 통일논의가 없었다. 북한과의 교류가 증대된 이후로 統一論理의 개발에 조금해 해 왔으므로 일관성이 있을 수 없었다. 즉 현실성은 있으나 일관적인 논리로 체계화해 오지 못하였다. 현재 양측의 통일론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어 남북한의 기존 統一方案을 포괄할 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 회 : 세 분 지명토론자의 말씀을 먼저 듣고 청중석에 토론을 개방하도록 하겠다. 다음에는 연세대학교 안병준 교수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다.

안 병 준 교수(지명토론) : 유럽에서는 冷戰이 해소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등 국제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럽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아시아에는 전략적으로 비대칭적이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아시아에는 유럽과 달리 領土問題가 남아 있다. 유럽에서는 共產主義가 종식되었으나 아시아에는 공산주의가 건재하고 있으며 아시아 공산주의국가들의 國內政治狀況이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대부분 雙務關係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쌍무관계가 개선되어, 4강 간의 전쟁은 불가능하며 어느 한 국가가 霸權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느슨한 4강체제를 이룰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는 빠른 經濟成長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地域主義가 등장하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은 아·태지역 12개국 무역장관 및 의무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APEC에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호 의존된 경제관계에 완전히 소외되어 왔으나, 발전을 위해 향후 아시아의 力動的 經濟關係에 참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 지역의 질서는 향후 美·日 안보협력 내지 美·日 역할분담

에 의하여 주도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시아에서 유럽에서와 같은 集團 安保體制를 주장하고(소련), 지역국가 간의 안보협력을 주장하고 있다(ASEAN). 또 다른 일부에서는 미국을 이 지역에 묶어두기 위해 美·日 安保條約이 유지되어야 하며, 일본의 야심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 이 지역에 머물러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며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은 두번째 견해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 지역에서 美·日 간의 군사, 경제 분야에 있어서 役割分擔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섯째, 동아시아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와 남북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궁극적으로 주변 4강의 交叉承認과 남북한 간의 대화 및 교류를 자극하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韓半島問題의 韓國化”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주변 4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남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核問題가 해결되면 중국은 한국과, 美·日은 북한과 각각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주변 4강은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간의 현안은 남북한이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國際環境은 한반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核査察을 수용할 것이겠지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 내려고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국내환경과 관련하여 한국은 민주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내정세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외교정책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對南政策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소련과의 국교수립 및 중국과의 무역사무소 개설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만큼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統一政策은 외교정책이 발전한 것 만큼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의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과 연계시켜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對美, 對日 統一外交가 한국 외교의 큰 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통일정책과 외교정책 간의 통일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관성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북한은 대외정책을 전환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對南政策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내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초당적인, 범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言論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언론이 앞서 가는 것은 결코 남북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브리핑 등을 통하여 언론에 일관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의 부정적인 측면 즉 統一費用에 대한 현실적 시각과 인식을 가질 때 통일은 빨라질 것이다. 통일에 대한 환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사 회 : 마지막 지명토론자인 이호재 교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다.

이 호 재 교수(지명토론) : 통일정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과거에 가지고 있던 3가지 假定에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統一論議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우리는 북한을 비합리적인 존재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자세변화를 보면 북한에는 理性的인 엘리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強穩派 가운데 온건파가 강경파를 누르고 득세할 경우 보다 合理的인 政策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우리는 남북한 간의 통일정책수립에 있어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유엔문제, 核査察問題 등에서

보여지듯이 통일정책수립에 있어 合意 可能性이 매우 높아졌으며 妥協도 가능하다고 본다. 쌍방이 노력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우리는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安保論理에서 통일논의를 해 왔다. 안보논리는 우리의 일방적인 논리이다. 향후 남북한 관계는 군사력논리에서 탈피하여 비군사적인 共同體論理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안보논리는 극복해야 하며 이것이 없이는 상호간의 불신만 있을 뿐이다. 북한은 한국과 비교할 때 모든 면에서 수세에 있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우위에 있는 만큼, 과거 북한이 우위에 있을 때 가졌던 가정을 수정해야만 문제해결의 열쇠가 보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그간 소외되었던, 그리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급박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긴급한 과제들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軍縮問題가 核論議와 더불어 급박히 등장할 것이다. 군축문제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군축문제에는 남북한 군사력의 공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非核地帶案이다. 비핵지대안과 주한미군 核兵器 철수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비핵지대안은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제적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연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 핵병기 철수, 지상군 철수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不可侵宣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 經濟協力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安保를 위주로 하지 않는 남북한 관계는 경제협력이 중심이 될 것이며 타협의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일본의 시장이 되는 것을 막

아야 한다.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좀 더 충실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고려연방제, 남북연합, 통일에 긍정적인 東北亞體制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 회 :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공통된 견해를 간추려 보면, 統一環境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美·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美·日, 특히 일본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공통된 견해이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철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정책적 진의가 무엇이나, 즉 속임수인가 아니면 전략적 변화인가하는 점이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향후 통일문제를 정확히 연구하는데 핵심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이 문제는 객관적 자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觀點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의도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중석의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될 수 있으면 정치학적인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북한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유 선 응 씨 : 統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 한반도의 위상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며 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70%는 통일이 된 것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통일 이후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문제이다. 통일 후 한국이 주변 4강 속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때 안보상의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본다. 특히 일본의 軍國主義의 부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 회 : 향후 통일정책 및 통일문제연구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이며 北韓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 문제

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귀순하여 현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안찬일 선생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안 찬 일 씨 :核問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분단구조 속에서 과거 金日成, 主體思想, 核 즉 사람, 이념,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어떠한 상장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금으로 도금한 쪽은 남쪽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일성의 진위문제, 주체사상, 핵문제도 남한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爭點化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수준에서 볼 때 核武器를 제조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남쪽에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 줌으로써 북한의 주장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남북한 군사력을 합해도 일본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 없다는 상황속에서 향후 “民族主義的 安保” 차원에서의 연구가 요망된다.

북한의 의도는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技術官僚(technocrat)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연형묵, 강성산, 김환 등의 선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남북한 관계는 서로간 출혈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사 회 :지금까지 民族統一研究院에서의 통일정책 대안개발에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지적이 많았다. 토론에서 제기된 논의를 정리하면 國際問題와 民族問題를 분리해서 연구하는 기존의 통일연구에 있어 偏向性을 시정하고 이를 조화시킨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주변 4강 美·蘇·中·日에 대한 연구, 특히 일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통일을 위한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分斷國 統一에 관한 선례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북한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民族統一研究院의 금년도 사업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분단국 통일사례는 國際研究室에서 금년도 중점 연구사업으로 선정해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분단 동서독의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겪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분석할 것인 바, 이는 향후 한반도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사회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도 정치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 연구원의 北韓研究室에서는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 전망”이라는 제목하에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기타 여러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한 學際的(inter-disciplinary)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10월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대외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북한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하는 데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이 금년 가을까지 나올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올바른 방향의 統一外交政策 내지 對北政策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토론과정에 참가해 주신 발표자 및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빈 면

<附錄> 會議 概要

第1回 國內學術會議

— 轉換期的 東北亞秩序와 南北韓 關係 —

日 時：1991年 6月 13日 (木) 09:30 - 20:00

場 所：타워호텔 (본관 1층 Rex Room)

09:30 - 09:50 登 錄

09:50 - 10:00 開會辭：李 秉 龍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10:00 - 12:30 第1會議：東北亞 4強과 韓半島

● 司會：李 相 禹 (西江大 教授)

● 發 表

· 朴 英 圭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長)

“美·蘇의 對東北亞 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鄭 鍾 旭 (서울大 教授)

“東北亞 秩序와 中·日의 役割”

● 討 論

· 朴 慶 緒 (中央大 教授)

· 具 宗 書 (中央日報 論說委員)

· 崔 宜 喆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長)

12:30 - 14:00 午餐 (타워호텔 코리아 가든)

- 14:00 - 16:30 第2會議：南北韓 關係의 發展方向
- 司會：柳世熙（漢陽大 教授）
 - 發表
 - 任鏞淳（成均館大 教授）
“北韓의 對美·日 關係改善이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
 - 韓英鳩（外交安保研究院 教授）
“유엔加入 以後의 南北韓 關係：展望과 問題點”
 - 討論
 - 高秉喆（일리노이大 教授）
 - 鄭鎮渭（延世大 教授）
 - 李達熙（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 16:30 - 16:45 Coffee Break
- 16:45 - 18:30 第3會議(綜合討論)：統一問題研究와 統一政策의 方向
- 司會：丁世鉉（民族統一研究院 副院長）
 - 討論
 - 金 惠（外國語大 教授）
 - 安秉俊（延世大 教授）
 - 李昊宰（高麗大 教授）
 - 崔宜喆（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長）
 - 李達熙（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 18:30 - 20:00 리셉션 (타워호텔 Jelkova Hall)